

Md.b.9

제 1 기

전 · 장 · 협  
아카데미

일시 : 1994. 4. 21

전국장애인가족협회



# 목 차

## I 부 민중의 역사

- 1회 올바른 민중의 역사는 무엇인가?  
박준성 연구원 (역사학연구소, 성대 강사)
- 2회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 생성과 발전 그리고 소멸  
조현욱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 석사과정)
- 3회 현 시기 한국 민중운동의 현황과 과제  
김종박 사무처장 (민중정치연합)
- 4회 한국 자본주의 진단  
박규호 연구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II부 평등의 새로운 세상

- 5회 사회민주주의 사회의 사회복지 제도 진단  
남구현 (한신대 강사)
- 6회 한국 자본주의에서의 사회복지 현황  
김기덕 연구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7회 한국 자본주의와 장애인 문제  
이경미 연구원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연구실, 사회학 석사)
- 8회 한국의 장애인들, 무엇을 할 것인가?  
김대성 집행위원장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1. 역사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

- \* 길을 가다가,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었다면? 살아가다가 막막할 때면 어떻게 하나?
- ◎ 역사가 없다면? \* 기억상실증에 걸린 개인 \* 역사가 없는 민족
- ◎ 과거 - 현재 - 미래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며 미래의 역사. 현재를 역사적으로 인식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전망하고 건설
  - 역사에 대한 무관심은 과거에 대한 무관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현재의 진실과 바람직한 미래를 창조하려는 노력의 포기
- ◎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 ① 인간의 존재에 대한 역사적 이해 - 사회속의 인간, 역사속의 인간
  - ② 현재 사회에 대한 역사적 이해 - 역사의 합법칙적인 발전
  - ③ 역사의 경험. 교훈을 통한 역사적 비판 능력 함양 - 인식의 폭의 확대
  - ④ 감성과 감정의 계발

## 2. 우리가 알아온, 쉽게 접하는 역사는?

- 거꾸로된 역사, 지배층 중심의 역사 -

- ◎ '국정' 국사교과서의 문제점 - '국정' '검인정'
- 1973. 1974년 문교부 장학목표 : '유신과업 수행에 앞장서는 참다운 새 한국인'  
'유신과업 수행에 앞장서는 성실하고 능력있는 한국인'

### # 1974, 1979년 고교국사

대한민국은 1972년,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하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달성할 정치,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헌법을 개정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이로부터 사회의 비능률적, 비생산적 요소를 불식하고 전근대적 생활 의식과 사대 사상을 제거하여 한국 민주주의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 # 1990년 고교국사 < 10월 유신과 제4공화국 >

박정희는 주한 미군 철수에 따른 국가 안보상의 위기를 구실로 집권 체제를 개편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이른바 10월 유신을 선포하였다(1972. 10.). 이로써 제4공화국이 성립되었다.

유신 체제는 능률을 극대화하고 국력을 집약한다는 명분 아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변질시킨 권위주의 체제였으며, 이것은 민주 헌정 체제로부터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으로써 좌우할 수 있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대통령을 선출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유신 체제는 권위주의적 체제의 경직성과 각종 역기능이 심화됨으로써 국내외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았다. 특히, 국내에서는 학원, 언론, 종교, 정계 등 각 분야에서 민주 회복과 개헌 및 반체제 인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반정부 운동이 가열되었고, 국제적



으로는 대미, 대일 외교 관계가 악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긴급 조치를 선포하여 반체제 운동에 강경하게 대처하였으나, 정치적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결국, 10.26사태가 일어나, 유신 체제하의 제4공화국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1979).

● TV 사극 - '과거의 탈을 쓴 현대판 애정 오락물'

● 보수언론의 역사인식

- 국사교과서개편 시안에 대한 보도 - '10월민중항쟁' '제주4.3항쟁'
- 서재필 귀국에 대한 보도

● 선전 광고

# '노사분규?' (87.8.18) \* S

지금 이시간에도 외화획득의 귀중한 시간이 소비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나친 노사간의 마찰은 온국민의 바쁨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당파싸움속에 온백성이 굶주렸던 이조말기 - 가난했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을 받아 36년간이란 긴세월을 나라잃은 설움에 울어야 했던 눈물겹고 슬픈 현실을 우리는 가슴속깊이 되새기면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먹을 것 못먹고, 입을 것 못입고, 놀 것 못놀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였던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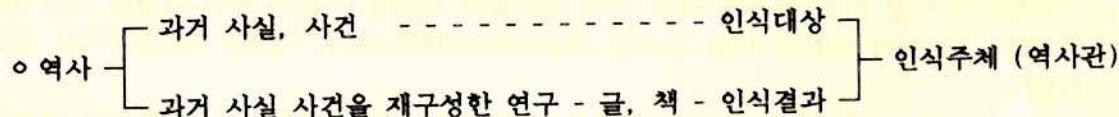
고용주는 가정으로 치면 부모가 아닙니까? 부모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참고 때로는 굶주려가면서도 자식에게 만큼은 잘 먹이려고하는 숭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가 사치하고 허영에 들떠 있다면 어느 자식이 부모를 순종하고 존경하겠습니까?

또, 근로자는 가정으로 치면 자식이 아닙니까? 자신된 도리로 부모에게 대들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모두 어디 불평불만이 없겠습니까? 국제경쟁이 높아진 지금 대외신용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또 다시 경제대국들에 의해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일을 하면서 노사간에 대화로서 해결토록 합시다.

지나친 노사간의 마찰은 온국민의 바쁨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고용주는 종업원을 자식으로 대하고 종업원은 고용주를 부모처럼 생각하면서 대화한다면 5천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문화민족의 멋진 모습을 또한번 세계에 과시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승리자들의 모임 챔프그룹

\* 역사와 역사인식



(시대, 지역, 사회속의 위치, 역사연구의 발달 )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 사회적 의식은 사회적 존재에 능동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 거꾸로된 역사, 지배층 중심의 역사

지배층 중심의 역사는 생산과 투쟁을 통하여 가난과 결핍, 지배와 억압을 깨뜨리고 역사를 발전시켜온 민중의 삶의 모습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 역사, 역사의 변화 발전을 올바로 인식하고 민중과 함께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실천하여 역사를 진전시켜온 역사의 위인 들은 '지배자'에 의해 가리워진 역사, 그래서 나오는 무관한 따로 노는 역사, 소수 지배세력의 이익을 옹호하는 역사

3.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① 역사의 사실을 사실대로 인식해야 한다.

똥다리 (국교 6년)  
우리 동네에 똥다리  
옛날에는 밭에 흐르던  
물이 맑았다고 하신다./  
지금은 공장이 생기면서  
폐수가 흐르면서  
물이 드러워졌다./  
똥다리라고 왜 하는가  
폐수만 버리는 것  
아니고  
똥까지 공장에서 버려서  
똥다리라고 하는 것 같다./  
나는 옛날 그 다리  
보고 싶다.

시골아침  
어머니는  
아궁이에 새벽을  
태우고 있다.  
술 안엔  
아침이 끓는 소리  
그제야  
잠꾸러기 앞산은  
하얀 안개빛  
커튼을 말아 올리고  
올 아래엔  
 짹짹  
아침을 쪼아먹는 참새들  
나는 산새 울음을  
신나게 쓸어 모으고 있다.

(1990년 국교 6-1 교과서)  
들로 가신 엄마 생각,  
책을 펼치면  
책장은 그대로  
푸른 보리밭.  
이 많은 이랑의  
어디만큼에  
호미 들고 계실까?  
우리 엄마는-----./  
글자의 이랑을

( 국교 6년 )  
어머니께서 한 번도 안 해 보던 나무를  
깊은 산 속에 가서 해 올라 하신다.  
나는 가슴이 떨컹 했다.  
언니도 나도 동생도 다 같이  
엄마는 집에 있어!  
우리가 가서 나무 해 가지고 올께 엄마,  
하니까 엄마는 막 꾸중하신다.  
학교는 안 가고 나무하러 가나?  
아예 그런 소리 말라 하신다.



눈길로 타면서  
엄마가 김을 매듯  
책을 읽으면,  
줄을 선 글자들은  
싱싱한 보리 숲.  
땀 적은 흙냄새  
엄마 목소리.

눈물이 나왔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더라면  
엄마가 저런 고생을 안 하실 텐데,  
세상이 원망스러웠다.

- 참 (眞) = 있는 것을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  
(무엇)인 것을 (무엇)이라고 하고 (무엇이) 아닌 것을 (무엇이)  
아니라고 하는 것
- 거짓(僞) = 없는 것을 있다고 하거나,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  
(무엇)인 것을 (무엇)이 아니라고 하거나, (무엇이) 아닌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것
- 좋은(善) = 있을 것이 있음 + 없을 것이 없음
- 나쁜(惡) = 있을 것이 없음 / 없을 것이 있음

○ 시간(시점), 공간(지점) 전후관계, 사회모순, 역사의 과제, 이해관계를 고려 - 비판적. 종합적. 총체적 인식

- 다음 노래들은 어떤 때 어느 곳에서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을까?

# 희망의 아침(이광수 작사, 홍난파 작곡) \* T.S

1. 밤이 새었다 희망의 아침 동편 하늘에 솟는 햇발은  
다들 받으라 듬뿍 받아서 소리소리 높여서 만세 불러라
2. 이러 나가라 우리 임금의 분부 받자와 일역 일심히  
넓은 천지에 8-자의 새-른-세계를 일육하라고
3. 대륙 이만리 대양 10만리 대아세아의 대공제국의  
우리 일장기 날리는 곳이 자자손손 만대의 복누릴 국토

\*\* 새벽 (이광수)

새해가 왔네.  
지구가 처음 보는 위대한 새해, 탐욕의 지옥인 구세계가  
무너지고, 인의와 예의 새 세계의 터를 닦는 새해.  
태평양의 물결에 잔잔함이 돌아오고, 아세아의 천지에 부흥의 만세소리가 우렁차게 일  
어날 새해  
기뻐라. 나는 이 새해를 보았어라, 개벽 이래에 처음 오는 위대한 새해를 노래하는 나  
의 행운이여.  
그러나 1억의 동포여

이 해 새해는 또 땀을 많이 흘려야 할 해.

-----  
씩씩한 우리 아들들은 총을 메고 전장으로 나가고  
어여쁜 우리 딸들은 몸뻐를 입고 공장으로 농장으로 나서네.  
말 모르는 마소까지도 나라 일 위해 나서는 오늘이 아닌가.  
천년화평 도의세계를 세우랍신  
우리 임금님의 명을 받자와  
'예' '예' 하고 집에서 뛰어나오는 무리  
이날 설날에 반도삼천리도 기쁨의 일장기 바다.  
무한한 영광과 희망의 위대한 새해여. (『매일신보』 1944. 1. 1)

\*\* 창씨의 동기 (이광수)

내가 香山이라고 氏를 창설하고 광랑이라고 일본적인 명으로 개한 동기는 황송한 말씀  
이나 천황어명과 독법을 같이하는 씨명을 가지자는 것이다. 나는 깊이깊이 깊이 내 자손  
과 조선민족의 장래를 고려한 끝에 이리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굳은 신념에 도달한 까닭  
이다. 나는 천황의 신민이다. 내 자손도 천황의 신민으로 살 것이다 ....

\*\* 반민특위에서 이광수의 고백

12월 8일 대동아전쟁이 일어나자 나는 조선민족이 대 위기에 있음을 느끼고 일부 인사  
라도 일본에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줌이 민족의 목전에 임박한 위기를 모면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기왕 버린 몸이니 이 경우에 희생되기를 스스로 결심하였다. ... 동경에 가서  
학병을 강요케 된 것은 학병을 나가지 않으면 학병을 나가서 받는 것 이상의 고생을 할  
것같기에 나가라고 권하였다... 황민화의 길만이 조선민족이 사러나갈 길이라고 생각하  
였다. ... 모두가 민족을 평안히 살기 위하여 약한 몸을 무릅쓰고 애를 썼는데 반민행위  
란 무슨 소리인가.

\*\* 홍난파(1898-1941) 창씨명 모리카와 준(森川 潤) 고향의 봄, 봉선화 -- '민족적 수절을  
지킨 음악가' (?)

1912년 황성기독교청년회 중학부 졸업, 1913년부터 3년동안 음악학교 '조선정악전습소  
서양악과'에서 바이올린 수업, 1918년(22세) 일본 '도쿄음악학교'로 유학. 1919년 귀국  
바이올린연주가, 작곡가, 평론가, 음악교육가, 지휘자, 작가로 활동, 1926년 사립인 도쿄  
고등음악학원에 편입 1929년 졸업, 1931년 7월 미국 시카고 서유드 음악학교에서 2년간  
수학.

경성악우회 주간(1919), 연악회 창설(1922), 조선음악가협회 상무이사(1931), 이화여  
전 음악강사(1933), 난파 트리오 조직(1933)과 활동, 경성방송국 양악부 책임자로서 경  
성방송관현악단 조직과 지휘(1936), 경성음악전문학교 교수(1938)  
'서양음악으로 민족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민족개량적 음악활동. 1937년 7월 이후부터  
는 '민족음악개량운동'이 '친일음악운동'으로 급격하게 변모.



“조선음악 대부분이 극히 지원하여 해이하고 퇴영적인 기분에 싸여 있지마는 서양의 음악은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개 경쾌 장중하다”(1936)

1937년 4월 사회교화단체 '조선문예회' 회원으로 가입.

1937년 9월 15일 '시국가요발표회'에서 최남선 작사 「정의의 개가」에 곡

1937년 9월 30일 '시국가요 피로의 밤' 「장성의 파수」(최남선 작사) 「공군의 노래」

1938년 6월 대동민우회 가입. 본격적으로 친일가요 - '국민가요'를 지휘 방송 - 조선의 민족정신과 민족정서를 해체하려는 의도

중일전쟁이후 발표한 「희망의 아침」 '천황폐하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하자'

따라서 흥남파가 1930년대 벽두부터 주장한 순수음악운동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민족현실을 외면할 수 있었던 자기도피와 자기기만의 음악운동이었다.

1940년 10월 16일 국민총력조선연맹의 문화위원

1941년 1월 25일 '악단을 통하여 직역봉공 하고 신체제운동을 하기 위해' 결성된 조선음악협회 23명의 평의원 가운데 7명의 조선음악평의원 중 한 사람

1941년 녹막염으로 경성요양원에서 회한의 삶을 마감. 민족현실 없는 순수음악운동이 왜 식민지에서 허구인가, 음악과 음악을 다루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제기 (둘베개, 「친일파99인」③)

# 감격시대(강사랑 작사, 박시춘 작곡, 남인수 노래) \* T.S

1.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 숨쉬는 거리다

미풍은 속삭인다 불타는 눈동자 불러라 불러라 불러라 불러라 거리의 사랑아 휘파람을 불며 가자 내일의 청춘아

2. 거리는 부른다 정열에 넘치는 청춘의 바다여

깃발은 팔랑 팔랑 바람에 좋구나 저어라 저어라 저어라 저어라 바다의 사랑아 불희망 멀지 않다 행운의 빛길이

# 복지만리 (김영수 작사, 이재호 작곡, 백년설 노래) \* T.S

1. 달실은 마차다 해실은 마차다 청대콩 별판위에 헤이 휘파람을 불며 간다  
저 언덕을 넘어서면 새세상의 문이 있다

황색기층 대륙길에 어서가자 방울소리 울리며

2. 백마를 달리던 고구려 삼터다 파묻힌 성터위에 헤이 청노새는 간다 간다

저 고개를 넘어서면 새천지에 종이 운다

다함없는 대륙길에 빨리 가자 방울소리 울리며

\*\* 1930년대 중반이후의 식민지 조선사정과 일제의 식민지 민족말살 정책

◎ 1937년 7월 본격적인 중국침략개시 - 전시체제로 전환 - '내선일체' '황국신민화'

○ 1937년 1면1신사 설치 - 신사참배의 강요

○ 1937년 10월에 제정된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강요

① 우리는 황국신민이며 충성으로써 군국(君國)에 보답하자

② 우리 황국신민은 서로 신애협력(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굳게하자

③ 우리 황국신민은 인고단련의 힘을 키워서 황도(皇道)를 선양하자

○ 1938년 3월 조선교육령 개정 - '내선공학의 일원적 통제를 실현' - 일본어를 국어로

○ 1938년 지원병제도

○ 1938년 국가총동원법 -> 국민정신총동원운동

- 1938년 7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결성

○ 1939년 창씨개명제도 '조선민사령' - 성명제도를 폐지 씨명제 설정, 40년 2월 시행

\* 형식면에서 조선민족의 말살

○ 1939년 일선통혼(日鮮通婚)의 권장 \* 실질적 혈통적 말살

○ 선만일체화의 추진 - 만주강제이주정책 \* 지역적, 공간적 말살

- 1931년 만주침략개시이후, 1931년 만선농사회사 설립, 매년 2만호 10만명, 15개

년에 30만호 150만명의 이주계획. - 조선의 과잉인구 배출로 소작쟁의 회피.

- 1936년 9월 조선총독부, 선만척식주식회사 설정 - 조직적 이민 강행

- 일본 제국주의의 중국침략정책의 일환으로 이용.

- 1943년 재만 조선인 총수 약 154만명- 농민이 85% 대부분이 소작농

○ 1943년 '국어보급운동'의 대대적 전개 - 조선어폐지 \* 정신적 문화적 역사적 말살

◎ 조선민중의 빈궁화

○ 농가1호당 평균경지면적(논 밭 화전) - 1935 : 1.603정보 --> 1.502정보

○ 1인당 곡물소비량

주요 곡물 1인당 소비량 (단위 : 석)

	쌀	조	보리	밀	콩	계
1917~21년평균	0.686	0.323	0.439	0.110	0.183	1.741
1922~26 "	0.597	0.364	0.409	0.128	0.177	1.655
1927~31 "	0.476	0.356	0.388	0.115	0.156	1.491
1632~33 "	0.412	0.311	0.426	0.095	0.140	1.384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무엇을 짚어보아야 할까. 시간의 흐름선상에서 어느 때의 일인가, 어느 곳에서 일어났는가, 앞뒤 좌우 사정은 어떠한가, 다른 사건이나 인물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사회의 모순 그리고 사회의 모순구조에서 형성되는 계급관계, 대립되는 양대세력과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역사적 과제 해결의 방향에 합치하는가 역류하는가, 직접적으로는 그 일이 누구, 어떤 세력에게 이익이 되는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평가를 우리는 역사적 평가라고 한다.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 평가 능력을 기르려 한다.

# 아 대한민국 \* T



② 역사 변화 발전의 원리와 변화 발전이 가능성 인식 - 역사의 현실은 고정 불변하는 완결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과정 중의 일부. 노력과 실천이 필요

# 서정주의 변명

“ 모든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해방이 그토록 빨리 오리라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적어도 1,2백년 동안은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들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 송정오장 송가(松井伍長 頌歌) ( 서 정 주 )

아아 레이테만은 어데런가 / 언덕도 / 산도 / 뵈이지 않는  
구름만이 등등등 떠서 다니는 / 몇 천 길의 바다런가

얼굴에 붉은 홍조를 띠우고 / “갔다가 오겠습니다” / 웃으며 가드니  
새와 같은 비행기가 날아서 가드니 / 아우야 너는 다시 돌아오진 않는다

마쓰이 히데오! / 그대는 우리의 오장 우리의 자랑. / 그대는 조선 경기도 개성사람  
인씨(印氏)의 둘째아들 스물 한살 먹은 사내

마쓰이 히데오! / 그대는 우리의 가미가제 특별공격대원 / 귀국대원

우리의 동포들이 밤과 낮으로 / 정성껏 만들어 보낸 비행기 한 체에  
그대, 몸을 실어 날았다간 내리는 곳 / 조각조각 부서지는 산더미 같은 군함!  
대포와 폭발탄과 / 머리털이 샛노란 벌레 같은 병정을 신고  
우리의 땅과 목숨을 뺏으러 온/ 원수 영미의 항공모함을 / 그대  
몸뚱이로 내려져서 깨었는가? / 깨뜨리며 깨뜨리며 자네도 깨졌는가-----

장하도다 / 우리의 육군항공 오장 마쓰이 히데오여  
너로 하여 향기로운 삼천리의 산천이여 / 한결 더 질푸르른 우리의 하늘이여

아아 레이테만은 어데런가 / 몇 천 길의 바다런가

귀 귀울이면 / 여기서도, 역력히 들려오는 / 아득한 파도소리.....  
레이테만의 파도소리

(매일신보, 1944. 12. 9)

# <아침은 엽차로> (1943.6 『신시대』, 이숙중)

절미(節米) 절식(節食)이라 하기보다도, 어떤 방법으로 부족함을 보충해 나가느냐가 문제가 되었다. 요새처럼 야채가 풍부한 때는 가급적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한 끼는 꼭 죽으로 한다면 모자랄 것도 없다. 어른 들은 아침을 걸르는 대신, 그것을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나 임신부에게로 돌려야 할 것이다. 어른들에게 하루 세 끼는 전혀 필요가 없다. 아침은 뜨거운 엽차 한 잔이면 충분하다. 그러는 편이 훨씬 머릿도 개운해진다. 이렇게 엽차로 때우는 습관을 몸에 붙이도록 권고하겠다. (졸임)

전시에 음식물이 풍부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 굳이 이상해 하거나 투덜투덜 불평할 필요는 없다. 투덜대어본들 소용이 없다. 바로 이런 점을 끈기 있게, 정신력으로 극복하여 뚫고 나가야 하는 것이다.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죽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건강을 위해서 죽을 마시고, 소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야채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 더욱 더 맑고 상쾌한 기분으로 능률있게 일하기 위해서 아침은 엽차만으로 때우는 것이라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다.

# <바른 식생활> (송금선 : 덕성여자실업학교장)

새삼스럽게 절미 절식이라니 시대에 뒤쳐진 듯한 느낌입니다마는, 금년이야말로 결전의 해라, 다시 한번 우리의 식생활을 반성해 보는 것도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우리 조선사람은 너무 덮어놓고 과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쌀을 너무 먹어 왔어요. 아침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건 저 오들오들한, 가장 소화하기 어려운 쌀의 찌꺼기인 백미만을 먹고 있었읍니다. 그러니 아침부터 눈이 뻥해서 잠이 오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아슬아슬했다는 기분이 안 드는가요?...

아침은 가족 전체가 모두 죽으로 정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 편이 건강에도, 두뇌 활동에도 좋다는 것이 저 한 사람의 경험은 아니겠지요... 물론 어른들은 아침을 걸러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세 끼는 전혀 습관일 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이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면 현재 있는 것으로 기쁘게 이용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처럼 비교적 야채가 풍부할 때는 야채만으로 때워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 꿈에라도 지금은 전시니까 좀 참자라든가, 전쟁만 끝난다면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식생활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 (아이들이야 말로), 어떤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태연하게 야채면 야채만으로, 물이면 물만으로도 영양불량에 안 걸린 체질과 습관을 몸에 붙여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전국민이 함께 바른 식생활의 연성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시대』 1943. 6)

○ 이숙중(창씨명 宮村淑鐘)은 친일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평의원, 국민총력조선연맹 연성부 연성위원, 조선임전보국단 평의원과 부인대 지도위원으로, 송금선(창씨명 福澤玲子) 또한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대 지도위원과 애국금채회 간사 따위를 하면서 친일 행동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 해방후 교육--- 조선 교육위원회(10명 가운데 김성수, 유억겸, 현상윤, 백낙준, 김활란, 최규동, 윤일선), 교육심의회(백낙준, 김활란, 유억겸, 조동식, 고헌경, 장면, 손정규, 장덕수, 유진오, 김성수, 황신덕)



대학설립자 총학장등 : 고려대 - 김성수, 유진오, 연세대 - 백낙준, 이화여대 - 김활란, 중앙대 - 임영신, 성신여대 - 이숙종, 상명여대 - 배상명, 덕성여대 - 송금선, 서울여대 - 고헌경, 서울대 - 이춘호

교육이념 : '홍익인간' 교육법 1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 실현에 기여하게 할 목적으로 한다."

없어야 할 것을 없게 - 파괴 - 투쟁 - 투쟁의 역사  
있어야 할 것을 있게 - 건설 - 생산 - 노동의 역사

\*\* 메이데이 제하야 노동자 동무들에게

--- 우리들은 60주년 메-데-를 오날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맞게 된 것은 연합국의 덕택과 반일 민족 혁명가들의 거룩한 희생의 선물에서 얻은 것이라는 것을 한 사람도 이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함남북에서 노동 운동을 하든 혁명가들이 망명을 하면서 또는 땅굴 생활과 삼림 생활을 하면서 일제 경찰의 총칼을 방어하기 위하여 몽둥이와 칼을 유일한 무기로 하고 용감하게 싸운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함남 신흥 출생 이한0 동지는 1929년 신흥 탄광 습격 사건으로 망명하다가 1936년 검거되어 5년 형을 맞치고 강도 일제가 만들어 노흔 정치 예방 구금소에 구금됨으로부터 정치 운동자를 내노으라 예방 구금소를 철폐하라야만적 박해와 비인간적 취급을 하지 말라는 등 7개 요구를 들고 두번 단식 투쟁에 적지 안흔 승리를 하였으나 놈들은 제일로 미운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에게 온갖 모략, 위협, OO 무고와 테로를 하였기 때문에 분을 이기지 못하여 1943년 3월 1일에 단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놈들은 단식한지 20여 일 후에도 만세일계의 황국 일본에 반역자 임으로 죽이라고 말로서 다할 수 업는 능욕을 가하였습니다. 그는 단식한 지 백 오일 만인 6월 13일에 39세를 최기로 영원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뼈만 남엇든 그는 죽기 삼일 전에 나에게 부탁하기를, 나는 더 살 수 업스니 나의 뒷일을 동무들이 계승하여 조선 독립을 완성하기를 바라며 만일 동무가 살아 나거거든 동무들에게 일제가 이가치 나를 죽인 것을 전하여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기회를 엿지 못하여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지 못하고 오날 이 기회에 소개합니다.

그는 적과 가장 선두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비참하게도 장렬한 전사를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선배들의 위대하고 장렬한 투쟁을 본바더 이 기념을 통하여 더욱 굳게 단결하지 안흐면 안 되겠습니다. (전국노동자신문, 16호, 1946.4.26)

4. 주체적 삶 - 역사적 삶

참 (眞) = 있는 것을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  
거짓 (僞) = 없는 것을 있다고 하거나,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  
중음(善) = 있을 것이 있음 + 없을 것이 없음

나쁜(惡) = 있을 것이 없음 / 없을 것이 있음  
좋은 사회 - 자유, 평등, 평화, 우애, 협동, 사랑 - - - - -  
나쁜 사회 - 억압, 착취, 전쟁, 이기심, 탐욕, 증오 - - - - -

\* 운동 -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사회운동 - 나쁜 사회에서 좋은 사회로 -> 사람의 변화  
강고한 투쟁, 실천 ( 사회 제도와 자신 ) - 행동으로 평가

없어야 할 것을 없게 - 파괴 - 투쟁 - 투쟁의 역사  
있어야 할 것을 있게 - 건설 - 생산 - 노동의 역사

\* 도서관에서 수영을 할 수 없다.  
\* 서구화 근대화, 국제화의 문제? (백인신부와 옷, 사과 통조림 공장)

# 사랑 \* 1 - 김남주

사랑만이  
겨울을 이기고  
봄을 기다릴 줄 안다

사랑만이  
불모의 땅을 갈아엎고  
제 뼈를 갈아 재로 뿌릴 줄 안다

천 년을 두고 오늘  
봄의 언덕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줄 안다

그리고 가실을 끈넌 들에서  
사랑만이  
인간의 사랑만이  
사과 하나 들로 쪼개  
나눠 가질 줄 안다

# 옛마을을 지나며 - 김남주

찬서리  
나무끝을 날으는 까치를 위해  
홍시하나 남겨들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어

\* 모든 종류의 소외 극복

# 우리들의 죽음 (정태춘 작사, 작곡) \* T.S

# 민들레 처럼 (박노해 시, 김호철 곡) \* T.S

민들레 꽃처럼 살아야한다 내가슴에 새긴 불타는 투혼



무수한 발길에 짓밟힌대도 민들레처럼  
 모질고 모진이 생존의 땅에 내가 가야할 저 투쟁의 길에  
 온몸부딪히며 살아야한다 민들레 처럼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결코 빛나지 않을지라도  
 혼하고 너른 들풀과 어우러져 거침없이 피어나는 민들레  
 아 민들레 뜨거운 가슴 수천수백의 불씨가 되어  
 아 해방의 봄을 부른다 민들레의 부흥으로

## 자본주의의 생성, 발전 및 소멸

### 1. 강연을 시작하며

● 독일의 통일과 소련의 개혁과정 --> 두 개의 상이한 사회체계에 대한 평가(자본주의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보다 우월하다. 맑스주의는 인민들에게 독재와 궁핍만을 가져다 주었을 뿐이다. 사회주의는 종말을 고했다.)

● 반성의 기회 --> 자본주의 사회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특수성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가? 현재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노동운동·빈민운동·농민운동·민주화운동 등은 자본주의 체제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

● 주제: 자본주의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세세한 고찰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라는 일반적 성격을 고찰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보는 세계관을 제시하려는 것.

● 맑스

1) 역사연구에서 원시 공산주의,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라는 단계 구분

2)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통일로서의 생산양식이라는 개념을 창조

3) 사회주의가 올 것임을 예견

● 여기서 맑스가 본 자본주의 사회를 다룰것(자본주의 사회를 변호하는 것은 끊임 없이 변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과학적인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함).

맑스가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한 핵심은 자본주의 사회가 영구, 불변하다는 사상을 타파하고, 모든 역사적인 것이 그러하듯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을 걷는다고 본 것이다.

### 2. 자본주의의 생성

:무산대중의 대규모 출현

#### 1) 19세기 초기의 자본가

● 19세기 초기의 영국 자본가({자본론} 제1권 제33장)

--> 생산의 3요소(생산수단, 토지, 노동)가 있으면서도 생산 불가능

-->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상 매우 독특한 경제형태이며 거기에는 생산의 3요소가 매우 독특한 형태를 취해야 하기 때문

●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의 소유자가 자본가로서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의 생활수단을 얻을 수 없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로부터 일체의 생산수단을 빼앗아야 한다. 즉, 무산대중이 대규모로 출현해야 한다(일부 사람으로의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의 독점, 토지의 사유재산으로의 전환, 임금노예).

● 노동자가 생산수단과 토지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자본주의 생성기의 특징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 생애 전체의 특징



2) 직접적 생산자로부터 생산수단의 수탈(자본론 제1권 제8편 [이른바 시초축적])

- 나라마다 상이한 과정
- 봉건사회의 해체과정에서 관습에 의해 토지를 점유한 농민들이 증가
  - > 영주에 대한 인격적인 지배 종속관계가 지대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광범한 자영농의 출현
  - > 농민들은 자기의 노동에 의해 자기의 노동생산물을 취득
- 농업의 기술적 발전이나 농경지의 이용방법의 변화는 토지의 세분화와 분할이라는 장에 부딪침
  - > 토지의 합병과 대토지 소유 등장
- 법률적인 토지소유가 확립
  - > 농민들로부터 토지 수탈, 공유지 횡령, 국유지가 사적 소유로 전화
  - > 농민들의 추방
- 도시에서도 소규모의 수공업자가 멸망
- 맑스는 이러한 과정이 하나의 역사적 필연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역사적 진보의 불가피한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

3) 原罪?

- 부의 축적은 고리대자본과 상인자본의 활동에서 보듯이 정의나 노동과는 관계없이 사기, 약탈, 침략 등에 의거한 것이었으며, 특히 봉건적 생산양식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에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식민제도, 국채제도, 근대적 조세제도, 보호무역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 생활수단, 생산수단, 화폐가 무산대중의 노동을 착취함으로써 가치를 증식시키게 되며, 이리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산업자본이 형성
  - > 상인자본이나 고리대자본은 조연으로 전락

3. 자본주의의 발전

: 자본의 축적

1) 노동력의 가치

- 자본주의적 생산은 이윤의 획득이 직접적인 목적
  - > 이윤의 원천은 무엇인가?
- 전제
  - ① 等價交換의 가정: 경제를 유통영역과 생산영역으로 나누어, 유통영역에서 행해지는 상품의 판매와 구매에는 상품들이 자기 값대로 교환된다. (시장에서의 우연적인 가격변동으로부터 이윤을 얻는다면 자본주의의 장기적인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 높은 가격으로만 판매하려 할 것)

②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교환에서도 등가교환: 화폐의 소유자와 노동력의 소유자, 자본가는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구매하고 생산영역에서 노동자로 하여금 노동력을 합목적적으로 지출하게 하여 상품 생산, 그 등가를 화폐로 지불)

- 노동력 가치의 결정
- 비판: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 노동력도 모든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그것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
-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수요되는 생활수단들(자녀의 교육과 훈련, 교육에 필요한 것들도 포함)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량으로 귀착(참고 --노동자들의 월 평균 최저생계비)
- 임금수준이 노동자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상에 대하여

2) 잉여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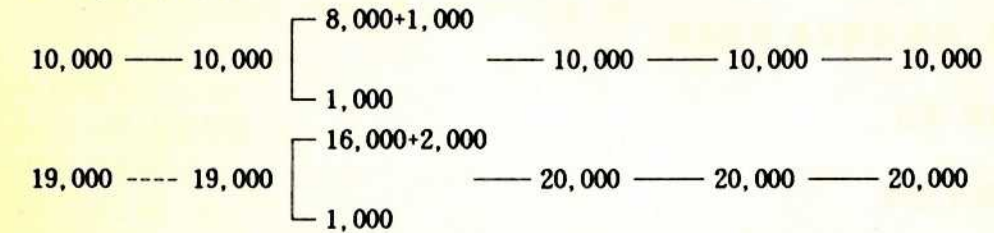
- 생산영역에서 발생



- 상품의 가치는 그것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또는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
  - > 모든 상품의 생산에는 인간의 구체적인 노동이 투하된다는 사실과 모든 상품들의 교환 과정에는 그 구체적인 노동이 하나의 동질의 추상적인 노동으로 환원되어 서로 비교된다는 사실에 근거

참고) 2A = 1B =====> 4A = 1B

- 가치의 이전
- 잉여노동, 잉여가치의 생산
- 노동력의 착취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가 생활수단과 생산수단의 독점적 소유자고, 자본가는 잉여가치를 획득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자본가에게 잉여노동을 제공
  - 참고) 표준노동일 제정을 위한 투쟁

3) 자본의 본성으로서의 기술혁신



- 자본은 잉여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하루의 노동시간을 연장시키든지 노동력의 가치를 인하하려고 노력--> 기술혁신
- > 필요노동시간을 축소시키는 것이 잉여노동을 증대시키는 길
- > 생활수단의 생산에는 기계와 원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수단의 가치 인하는 기계와 원료의 생산부문에서의 노동생산성의 상승도 수반해야 한다.
- > 경제전체에서의 기술혁신과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노동력의 가치를 인하시켜 잉여가치를 증대시키게 된다.
- 자본 사이의 경쟁에서 더욱 분명한 형태로 드러남
- > 경쟁 속에서 각 자본은 자기 상품의 가치를 사회적 평균 이하로 감소시키려고 하며, 이것이 생활수단의 가치 인하를 통해 잉여가치의 사회적 증대를 달성하는 것
- 기술혁신을 도입한다는 것은 자본 규모의 증대를 전제로 한다(자본의 집적과 집중).

#### 4) 노동자계급의 궁핍화 경향

- 노동자의 실질임금의 저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자본축적 과정은 노동자계급을 부유하게 만드는 경향과 궁핍하게 만드는 경향을 동시에 내포
- 궁핍화 경향의 하나의 요소는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사회적 노동생산력의 증대가 개별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 진다는 점
- > 기술혁신은 노동의 변환을 사활의 문제로 만들면서 노동자를 전면적으로 발달한 개인으로 성장시키는 경향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기술혁신은 취업자의 해고, 숙련의 무용지물화, 취업의 불안정 등에 의해 노동자계급을 궁핍화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 다른 요소는 산업예비군의 항상적인 존재
- 참고) 산업예비군의 발생, 산업예비군의 존재형태(필연적 산물임과 동시에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생존조건)
- 또 다른 요소는 자본축적의 진행과 생산력의 발달에 따라 생활용품의 종류와 수량이 증가
- > 시간외 노동, 가족 구성원을 직장으로

#### 5) 이윤율의 저하 경향

- 두 개의 경향의 분리

● 이윤율 =  $\frac{\text{연간 잉여가치량}}{\text{투하 총자본(불변자본+가변자본)}}$

$$\frac{C}{V} = \frac{Qc * Pc}{Qv * Qc}$$

S = an

$$r = \frac{s}{C + V} = \frac{an}{C + V} = \frac{n \frac{a}{V}}{\frac{C}{V} + 1}$$

- 이윤율의 저하경향을 상쇄시키는 요인: 생산요소들의 가격저하, 잉여가치율 상승, 가변자본의 회전기간 단축
- 이 모순되는 경향들이 자본축적의 특정국면에서 자본축적을 교란시키고 공황을 발생시킨다.
- 참고) 투자의욕과 투자능력
- 공황

#### 4. 자본주의의 소멸

##### 1) 기본명제

- 새로운 사회형태에 자리 양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안에서 발달한 생산력이 너무나 성장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충돌하게 되고, 이에따라 자본주의적 외피 파열
- 지배계급과 계급투쟁
- 기본명제
- 가. 자본주의는 영구불멸의 생산양식이 아니다(생산력의 발달에 따라 생산관계 변동).
- 나. 자본은 사회적 생산력을 무제한적으로 증대시킨다.
- 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발달을 저지하는 질곡이 되었다는 사실은 법률, 정치, 종교, 예술, 철학, 한마디로 말해 이데올로기에 반영된다.

##### 2)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충돌의 구체적인 예

- 공황
- 생산의 무정부성
- 환경문제
- 토지문제

##### 3) 생산의 사회화의 진전

-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새로운 생산관계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서는 후자의 싹이 전자의 틀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
- 이 개념은 자본 소유의 사회화(또는 집단화)와 집단노동의 발전을 포괄
- 주식회사의 예
- 자본의 집중, 독점의 형성, 그리고 국가의 간섭



● 결국 생산의 사회화의 진전은 자본 소유의 사회화, 노동의 사회화, 생산수단의 집중 등에 의거해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전환시키는 토대며, 생산요소들을 계획적으로 이용해 국민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근거다.

#### 4) 노동자계급의 주체적 성장

- 대자본가의 수는 끊임없이 줄어가지만 노동자계급은 그 수가 계속 증가하며, 또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메카니즘 그 자체에 의해 훈련되고 통일되며 조직된다(자본론 1권).
- 노동자들의 기능과 숙련 및 경영능력이 발달, 노동자들의 상호관련과 단결력이 증대, 노동운동을 통해 경제 전체를 파악하는 능력과 경제 전체를 민주적으로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 5.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

- 자유인들의 결합체, 또는 결합된 생산자들의 사회
- 사적 소유와 개인적 소유
- 상품, 상품의 가치, 상품들의 사회적 관계

## 한국 민중운동의 현황과 과제

### \* 우리 사업의 개선

요즈음 초조해 하는 활동가들이 많다. 특히 1992년 제 14대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영삼씨가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자 초조해 하는 활동가는 더 많아졌다. 초조한 게 심해지면 자기의 신념을 굽히고 부르주아의 하수인이 되기도 하고 김영삼씨의 개혁에 흠집이라도 내야겠다는 생각에 무리수를 두기도 한다. 마치 국민들은 보수화되어 버린 것 같고, 우리 주장을 받아들일 사람은 없어지는 것 같다. 겉으로는 사회주의가 승리한다고 큰 소리를 쳐보지만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조직 사업에서 빠지기도 하고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

#### 1. 지구전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 (1) 사회주의 승리의 필연성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사회주의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에 봐야 한다.

자본주의는 정치에서는 그런대로 민주적이다.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나라의 대표를 국민이 뽑는다. 그리고 지역의 대표도 지역 주민이 뽑는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후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나마의 민주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일반적인 자본주의 체제는 그렇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경제에서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자본주의는 경제에서 주권을 국민에게 준 게 아니라 개인에게 주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소유권을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자에게로 넘겨준다. 자본주의는 경제에서 독재다. 경제적 독립없는 정치적 독립이 허깨비 독립이라면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그런 점에서 허깨비 민주주의다. 경제에서 민주주의가 안되는데 정치에서 민주주의가 된다면 그런 정치의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정치에서 민주주의를 하고 경제에서도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다. 기업보다 몇백 배 큰 나라의 대표를 국민이 뽑듯이 기업의 대표도 그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직접 뽑자는 것이다. 정치에서만 민주주의를 하지 말고 경제에서도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사회주의라고 한다.

정치에서 한 사람의 왕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던 봉건전제군주제도가 민주주의로 바뀌는 것이 당연하듯이 경제에서도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갖는 제도가 모든 사람이 권한을 갖는 제도로 바뀌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그것을 우리는 역사의 발전 방향이라고 부른다.

나라의 대표를 국민이 뽑는 것이 상식이라면 10만명이나 되는 회사의 주인들을 한 사람이 모가지를 붙였다가 떼다가 할 수 있는 제도는 웃기는 제도다. 지금인 부르주아들이 독세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큰 회사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터무니 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식이 비상식을 이기는 것은 순리다.

그리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가리지 않고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다. 민중이 주인이 되는 제도가 민주주의고 한두 사람이 주인이 되는 제도가 독재다. 민주주의가 최고로 발전되면 당



연히 사회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는 그 어떤 자본주의 보다도 우수한 제도다.

사회주의는 노동자가 생산과 정치에서 주인이 되게 하는 제도다. 자본주의는 소수의 자본가가 생산의 주인이 되는 제도다. 더 많은 사람을 주인으로 만드는 제도가 더 적은 사람을 주인으로 만드는 제도를 앞서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사심만 같지 않다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대중은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그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우리가 노동자의 이익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우리 행동이 생각과 다르게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사회주의는 못살고 자본주의는 못산다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는 독재고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자본주의 나라에도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민주주의 하는 나라, 독재하는 나라가 있다. 사회주의 나라에도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민주주의 하는 나라, 독재하는 나라가 있다. 과거의 사회주의가 망한 것을 가지고 한탄할 필요도 없고 지금 잘 사는 자본주의 나라를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어쨌든 자본주의 체제보다 사회주의체제가 민중을 주인으로 만드는 민주주의를 할 가능성이 몇백 배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능성을 살리면 되는 것이다.

잘해보려다가 실수하는 일은 사람에게 늘 있는 일이다. 사회주의는 옳았지만 하다보니 실패도 한 것이다. 그것은 그 때 사회주의를 한 사람들의 잘못이다. 이런 잘못은 우리도 쉽게 범하고 지금도 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은 금융실명제 즉각 쟁취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할 때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벌인다는지, 시위를 한 데서 그쳐야 하는데 건물을 점거하는 데 까지 나가버린다는지 하여 생각과 다른 결과를 낳는 경우는 늘 있다.

자본제를 정착시키는데 수많은 시행착오와 자본주의를 개선하려는 수 많은 자체혁명이 필요했던 것처럼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데도 더 많은 시련과 고통이 필요하겠지만 애당초 사회주의가 잘못되었다는 식의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역사에서 더 많은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제도가 승리하는 것은 당연하고 더 민주적인 제도가 승리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특히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란 자본주의가 망해야 이룩되는 제도가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아무리 발전된 자본주의 보다도 훨씬 더 근로대중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생산시설을 파괴하면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생산기반과 그들의 문화까지도 흡수하면서 한단계 높은 제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상적인 경쟁을 통해서도 자본제를 지지하는 세력을 누르고 근로대중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본이 자본끼리의 경쟁을 억제할 수 없으면서 끊임없이 노동계급을 착취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현실이기도 하다.

## (2) 김영삼씨의 개혁이 성공할 것인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장기적인 전망에 기초한 것만은 아니다. 단기 정세를 봐도 우리에게 특별히 불리한 사정은 아니다. 물론 여기서 전제로 깔려야 하는 것은 객관적 정세에 따라 우리가 활동하는 방법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객관적 정세 자체가 사회주의의 승리나 패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라는 점이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최근 만들어지는 정세를 보자.

요즘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김영삼의 개혁정치는 두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원맨쇼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요란한 빈수레라는 것이다.

김영삼정부의 개혁정치는 대중을 들러리로 만들고 있다. 대중이 참여할 방법은 없는 상태에서 국민에게 해주겠다는 개혁정치가 역사 이래 성공한 적은 거의 없다. 그런 점에서 김영삼 정부는 쏘를 하고 있다. 우리가 대중을 구경꾼으로 만들어 놓고 뛰어 나가 실패한 선도적 투쟁 방법을 김영삼정부가 쓰고 있는 것이다.

김영삼정부는 취임 1백일을 맞으면서 이제까지는 대통령이 나서서 개혁을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이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런데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국민은 전부 소부르주아 집단들 뿐이다. 설사 김영삼정부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집단이 있어도 그 집단이 직접 참여하여 김영삼정부를 도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진짜 김영삼정부가 자신이 있다면 한국은행 총재도 한국은행 직원들이 직접 뽕게 해서 김영삼씨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 뽕히게 하면 될 것이다. 자기가 운영하는 당도 마찬가지다. 광범위하게 민주주의를 해서 보수 세력들을 탈락시키면 된다.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장 선거도 빨리 도입하고 노동조합의 독립도 빨리 보장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김영삼씨는 동참하라고 하면서도 동참할 통로를 전혀 마련 해주지 않고 있다. 그는 전혀 개혁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소리만 지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개혁이란 무엇인가? 부패한 관료를 감옥에 집어넣는 것 뿐인가? 군대에서 쿠데타 주동한 자들의 모가지를 치는 것인가? 그것도 개혁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개혁은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김영삼 정부에 사회주의적 개혁을 할 것인지를 검토하지 않는다. 다만 김영삼 정부가 부르주아 경제체제 안에서나마 제대로 경제 개혁을 할 것인지는 문제로 제한해서 검토할 뿐이다.

김영삼정부가 부르주아 체제 안에서나마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한국은행을 독립시키고, 법안이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서명만하면 발동되는 금융실명제법안을 발효시키고, 토지법안, 조세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대기업이 하청대금을 제대로 안주면서 중소기업 수탈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어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 요약하면 중소기업의 토대를 강화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부르주아적 한계 안에서나마 개혁을 성공시키는 방법이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는 제도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사람에게 손을 대고 있다. 그것도 정치보복의 한 수단으로 말이다. 김영삼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누차 말했다. 국가권력이 기업을 통제하지 않고 시장 경쟁에 맡기겠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박태준을 잡아 넣었다. 뒤가 구리지 않은 재벌이 어디 있는가? 박태준만 특별히 더 더럽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박태준은 외치고 싶을 것이다. '죄 없는 자들로 나를 쳐라!' 김영삼은 이미 재벌을 통제해버렸고 부르주아 체제 안에서의 경제개혁조차 물 건너 가게 만들고 있다.

초기 김영삼의 정책은 마치 기업의 무분별한 활동을 통제하는 듯 하지만 그것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기업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자기 손아귀에 두려는 통제다. 물론 기업을 자기 손아귀에 두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을 중심으로한 경제체도는 유지하여 반 대기업주의는 주는 것을 전제로 말이다. 김정부는 지금 중소기업을 적극 돕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이 김영삼정권의 개혁이 성과 없이 요란한 이유이다.

그러면 이후에는 김영삼정권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나마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초기는 개혁의 토대를 다지는 기간이라서 제도 개혁으로 나가지는 못했다고 치고 장



기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초기에는 재벌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재벌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육성하면서 재벌도 건전한 방향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지금 우리가 '김영삼의 개혁은 허구다'고 한 말이 너무 입빠른 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현재 뿐 아니라 미래도 부정적이다. 김영삼 정부가 변죽만 울리고 부르주아적 개혁의 핵심을 이루는 금융실명제 실시를 유보하고, 중소기업보호 정책을 강화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다시 말해서 소문만 크게 내고 먹을 것 없는 잔치판을 벌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김영삼정부는 여전히 독점재벌의 토대 위에 서있다. 김정부가 부르주아적 개혁에 성공하려면 대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해서 국제 시장을 휩쓸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해서 뒤를 받쳐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 수는 없다. 투자할 재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도 자금난에 시달리고 중소기업도 자금난에 시달리는데 한꺼번에 개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정치는 정책의 선택, 발전전략의 선택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김정부는 중소기업의 토대 강화라는 정책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독점재벌과 손을 잡고 있다. 김정부는 지금 재벌과 다시 손 잡는 정책을 쓰면서 겉보기만 요란한 푸닥거리를 계속하고 있다.

물론 재벌도 과거 처럼 중소기업을 수탈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은행의 대출도 약간씩은 중소기업으로 향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열쇠는 우리 나라 재벌이 중소기업을 수탈하지 않고도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졌어도 국제경쟁에서 뒤지기 시작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을 수탈하는 것이 자본의 생리다. 그런데 현재의 독점자본의 생산력 가지고 중소기업을 수탈하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와중에 중소기업까지 보호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김정부가 나름대로 개혁에 성공하려면 더 이상 지금처럼 재벌에 의존하는 정책을 써서는 안된다. 재벌의 생산시설이나 국제경쟁력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었다. 우리 나라 재벌의 기술력으로는 국제 사회에서 경쟁하여 살아남기 힘들다. 최근 수출이 잘 안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내재벌들이 그 동안 벌여놓은 돈을 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기 보다 부동산 투기 등 비생산적인 곳에 모두 다 써버려서 생긴 현상이다.

기술개발 수준을 재는 자는 기술규모지수이다. 1990년쯤 기준하여 미국을 1백으로 했을 때 일본 69.1, 독일 47.5, 프랑스 31, 한국 8.4이다. 더 나아가 앞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기술개발지수를 보면 국내 재벌들이 그동안 기술개발에 얼마나 게을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미국을 1백으로 했을 때 일본 55, 독일 38.7, 프랑스 23.1, 우리나라 4.4이다.

부패하고 무능한 관료와 재벌들은 1987년, 88년, 89년 단군 이래 최대호황이랄 때 벌여놓은 돈을 탕진하고 지금와서 국제경쟁력이 뒤진다면 그 탓을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다. 이 재벌을 중심으로 한국경제를 새로 일으킨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김영삼정부가 이들 재벌과 손을 끊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금융실명제나 토지법안, 세제는 손도 대지않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제경쟁력도 되살아나서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에 활력이 생긴다면 다행이겠지만 국제경제가 호전되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임시방편조차도 쉽게 마련될 것 같지 않다.

재벌들이 개과천선해서 하청 중소기업이라도 보호해줄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본

에 자비를 구하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이라는 점은 자본론의 핵심 이론이기도 하다.

이런 조건에서 정치적으로만 개혁을 하는 김영삼정부의 조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면목을 드러내 보일 것이고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허탈감 때문에 대중들도 다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게 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가난하던 시대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지금처럼 정신없이 김영삼정부를 지지하던 때를 돌아보면 쓴 웃음을 짓게 될 상황이 올 것이라는 점이다.

### (3) 초조하면 안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초조할 이유는 없다. 설사 김영삼 정권의 개혁이 성공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승리하려면 꼭 자본주의가 망해야 할 것처럼 이야기 한다. 마치 선진국이 되면 노동자들이 귀족이 되어서 혁명에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것은 러시아는 봉건사회니까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경제결정론이 잘못이었던 것과 똑같은 잘못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가 경제 결정론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인간의 주체적 노력으로 혁명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선진 자본주의 나라에는 그 나라에 맞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 있고 우리 나라에는 우리 나라에 맞는 사회주의의 길이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1970년대의 혁명운동의 방법이 다르고, 1990년대의 혁명운동 방법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경제가 조금 발전하면 대중이 보수화되고 만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대중은 늘 진보적이다. 물론 나라에 따라 대중의 진보성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진보라는 개념 자체가 절대로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나라로 따지면 대중들은 여전히 진보적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면 사람들은 더 많은 교육을 받는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인권이 무엇인지 알고, 사회주의가 무엇인지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노동으로부터 자기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안다. 우리만이 노동자를 각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들도 어쩔 수 없이 노동자를 교육시키고 주체적 인간으로 만들어낸다. 자본주의 자체가 그 자신의 무덤자리를 파는 노동자를 만들어내듯이 의식면에서도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노동자 의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경제가 발전하면 혁명이 물 건너 가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초조해지는 것이다. 초조해지면 이론도 황당해 진다. 김영삼 정부의 개혁을 평가하는 것도 그 예다. 초조한 사람들은 김정부의 개혁은 부르주아적 한계 안에서의 개혁이니까 개혁이 되어도 노동자가 착취 수탈 당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선전한다. 이것은 똥이 더럽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이다. 김정부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겠다고 하지 않은 이상 노동자-자본가 관계가 철폐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의미에서 노동자가 고통당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당연한 말을 자꾸 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고 해롭기까지 하다. 왜냐면 개혁이 되면 노-자관계는 철폐되지 않지만 노동자들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당연한 사실까지도 무시하고 노동자는 여전히 어렵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개혁이 되어도 노동자는 어렵다는 말은 개혁의 객관적 현실에 눈을 감는 행위다. 노동자가 지금보다 잘살게 되는 것이 명백한 현실인데도 못살게 된다고 우겨대는 것이야말로 초조감이 극도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초조하다 보니 어떻게든 김영삼 정부의 개혁에 흠집을 내려고 한다. 특별한 계기



도 없는데 가두시위를 하고, 또 무리한 요구를 내세워서 탄압을 초래하는 식이다. 한총련 출범대회에서 과거처럼 시위를 하다가 옥을 바가지로 먹은 것이나 아직 때도 안되었는데 통일 운동 한다고 길에 드러누워 옥을 먹는 것이나 다 어떻게든 흠집을 내 보려는 초조감에서 나온 행동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흠집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근로대중을 위한 정치를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김영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요즘 유행하는 개혁만 해도 마찬가지다. 개혁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김영삼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개혁이 문제일 뿐이다. 우리는 단순히 개혁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중심이 된 사회주의 진영의 주도하에 개혁을 쟁취해나가는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흠집내기가 아니라 노동자를 정치의 주역으로 복귀시켜내는 투쟁을 착실히 벌여야 한다.

초조한 사람들은 자기가 초조한 이유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 그들이 초조한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앞서 말한대로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혁명정신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운동이 망한다고 생각해서고 다른 하나는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은 자기들이 생각해온 민중항쟁 노선이 불가능해졌는데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서 생긴 초조감이다.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 이렇다. 김영삼이 개혁해서 잘 살게 되면 그것도 좋은 것이고, 그 때도 여전히 대중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려 하고, 민중봉기 노선 대신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더욱 진지한 모색이 필요한 것일 뿐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다.

## 2. 선거로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앞에서 사실상 민중봉기 노선이 불가능해지면서 운동가들이 초조해졌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현실을 봐야 한다. 혁명하는데 상황을 넘어서서 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은 없다. 러시아 혁명, 중국 혁명, 베트남 혁명, 쿠바 혁명, 니카라과 혁명을 보자. 방법이 다 달랐다. 문제는 나라의 조건에 따라 택할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택하면 되는 것이다.

(1) 현재 국민들은 즉각적인 민중봉기 노선을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를 둘러싼 조건은 많이 바뀌었다. 그 변한 조건은 80년 중엽부터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한국 경제의 발전에 따른 것이다. 87년 6월 항쟁은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만들어진 여러 계급의 상태가 정치적으로 마무리 지어진 것이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사태는 급격하게 달라졌다.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선거인단이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던 것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으로 바뀌었고,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노태우 대신 어느새 문민정부라고 부를 수 있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것도 달라진 현실이다. 김대중씨가 선거에서 지고도 패배를 깨닫지 못한 것도 변화다. 소부르주아의 입장을 대변하기는 하나 반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겨레신문]이 만들어진 것도 변화다. 우리 운동 쪽으로 본다면 여전히 제한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공공연하게 쓰는 것도 변화다.

이러한 변화를 아주 재치있게 요약한 글이 있다.

"이제 1990년대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의 우리의 운동은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1980년대까지 우리는 누가 보기에 '나쁜 놈'인 반민주적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내걸고 싸웠습니다. 1990년대는 '민주주의'로 자기를 치장하면서도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보수대연합 체제'에 맞서 싸워야 하는 시대입니다."<sup>1)</sup>

이런 주장은 이제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다.

"옳은 지 그른 지 판단은 유보하고 대중정서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sup>2)</sup>

우리를 둘러싼 상황 중에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대중들이 더 이상 1987년까지의 운동노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1987년 이전까지 우리가 택한 전략은 애매한 점은 있지만 대중투쟁, 민중항쟁, 민중봉기, 무장항쟁 등이었다. 대중투쟁과 무장항쟁은 전혀 다른데도 같이 썼다는 점에서 절충적이었는데 크게 보면 민중봉기 혹은 민중항쟁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시위를 발전시켜 시민이 자발적으로 무장하는 광주항쟁 방식이 모델이었다. 우리는 이 방법으로 민중권력을 수립하려고 해왔다.

1987년까지는 누가 보아도 이 노선이 옳았다. 그 때는 싸움판이 형성되면 대중들이 방해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회에 참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투쟁 전술에서도 앞장선 부대가 화염병과 각목을 들고 전경과 맞서고 뒤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차도에서 대회를 열 수도 있었다. 그 때는 집회를 열면 대중들이 참여를 했다. 대중의 요구를 대변하는 대회고 집회였기 때문이다. 그 때 그런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부대가 넥타이 부대였다. 즉 명동에서 집회 하면 사무직 노동자들까지 넥타이를 매고 참여했는데 신문에서 사무직 노동자들을 일러 넥타이 부대라고 했다.

그런데 요즈음은 어떤가? 사실 요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폐가 있다. 87년 이후에는 계속 그랬다. 87년 직후에는 대중들에게도 과거의 관성이 남아 있어서 약간 합류했지만 88년 대통령 선거를 지나면서부터는 사회주의자가 조직한 시위대와 대중은 분리되었다. 대중은 구경만하고 결코 시위대에 합류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소위 기동타격전이 등장했다. 2,30명으로 파출소를 습격하는 전술까지 등장한 것이다. 대회도 마찬가지다. 대중들은 대회를 구경할 뿐이다. 합리화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회장 주변에 대중들이 조금만 모여도 대중들의 관심이 높고 지지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리에서 약장수가 약을 팔아도 할 일 없는 사람이 모이는 것 하고 별로 차이 나지 않는 정도다.

대중들은 더 이상 1987년까지 지지했던 투쟁방법을 지지하지 않는다.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987년 이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방법을 쓰려고 해왔다. 아니면 새로운 상황에 맞는 전략이 나오지 않으면서 과거의 방법을 되풀이 해왔다.

대중들은 1987년을 거치면서 당시 대통령으로 선출된 노태우씨가 문제는 많지만 국민의

1) 청년연석회의 자료집, 「이제 새로운 청년운동이 시작됩니다」

2) 염무웅,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 1993. 2. 24



합의를 얻어냈다고 생각했다. 혹은 정통성이 있는 정부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992년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씨가 당선된 것은 그 연장선에 놓여 있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이 1987년과 그 이후 상황에 똑같은 방법으로 대처하려 했다. 사실은 노태우와 김영삼은 같았고 노태우와 전두환은 달랐는데 우리는 노태우와 김영삼이 다른 것 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주의 진영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전략을 바꾸어야 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회주의 진영에서 합의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사업을 혁신해야 한다는 말도 많이 나온 것이다. 문제는 사업을 혁신해야 한다고 하지만 1987년 이전과 달라진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끔씩 달라진 사업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바뀐 상황이 강요한 것을 따라가는데 지나지 않는다. 또 그 바뀐이란 전략의 변화를 동반한 변화가 아니라 6월항쟁 이전 상황의 연장선에서 있는 바뀐이다.

국민들은 옛날보다는 살기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 중 60%정도가 자기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만 노력하면 더 잘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 변화를 바라기는 하지만 사회구조를 급격하게 뜯어 고치는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김영삼정부가 말하는 안정 속의 개혁이라는 슬로건이 먹혀 들어간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87년 이전의 민중항쟁노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은 87년 이후 부르주아 정부가 나름대로 안정되고 국민들 사이에 중산층 의식이 확산되면 사회주의 운동이 관속이나 들어가는 것처럼 조금하면서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자본주의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회주의는 더 빨리 발전할 수 있고, 자본주의가 아무리 좋게 발전해도 대중들은 사회주의를 더 지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사회주의자들은 대안을 만들면서 비판하기 보다 부르주아 정부에 흠집내는 일에만 열심이었다.

현실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은 것, 대중은 언제라도 폭발할 것 처럼 생각하고 전략에 변화를 가져 오지 않은 것이 결국 모험주의적 운동 방법을 만들어냈다.

### (2) 민중봉기 노선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민중봉기노선을 지지했다가 그것을 지지하지 않은데는 1987년의 6.29선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6.29 이전에는 국민들이 자기의 대표마저도 자기가 직접 뽑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상황에서 국민들은 더 이상 파쇼체제와 타협하기를 거부했고, 야당도 투쟁에 나섰다. 파쇼체제로서는 대단히 위협했던 그때에 사실은 국제경기가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이라는 3저호황 국면이 힘을 발휘하면서 부르주아체제 안에서 타협할 수 있게 하는 물적 토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의 투쟁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투쟁에 멈춰 있었고 사회주의 진영은 대단히 힘이 미약했는데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 사회주의 진영이 독세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부르주아 체제 내부의 요구가 6.29선언을 가능하게 했다고도 할 수 있다.

6.29 선언 후 87, 88, 89년은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불리던 시기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대중들은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민주제도가 정착되고, 경제적으로도 만족하면서 87년 이전과 다른 심리 상태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분석이 더 설득력을 가지려면 경제적 분석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이 글은 애시당초 유물론적인 기초는 허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당장 일해야 하는 우리는 감을 통해서 토대를 추론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때

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때라고도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우리의 전략을 지지하지 않게 되었다.

### (3) 그런데도 사회주의 진영은 옛 방법에만 매달렸다

국민들이 민중항쟁 노선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사회주의 진영은 다른 전략을 마련하지 않고 옛 방법에만 매달렸다. 어떻게 보면 목표 상실이다. 옛날에는 시위만 열심히 하면 되었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게 된 것이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1987년에도 있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전에는 '독재타도 호헌철폐'만 외치고 시위를 조직하는 게 일이었다. 1987년 6월 29일 전두환, 노태우가 전술을 바꾸자 사람들은 표적을 잃어 버렸다. 그때도 여진이 남아서 명동성당에서는 수시로 집회가 열렸는데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그 x 이 그 x 이다'는 구호가 유행했다. 사실은 즉각 민중후보 백기완 운동이 시작했어야 했다.<sup>3)</sup>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서 대중들은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니까 상대편을 공격하기만 했지 대안을 만들어내지는 못했고 운동권도 덩달아 과거일에 매달리면서 반의 반결음도 나가지 못한 것이다.

지금도 상황은 그와 비슷하다. 말로 할 때는 민중항쟁 노선을 그대로 고수하면 안된다고 하면서도 다른 방법을 적극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것은 대중사업을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재없이 떠돌면서도 단 한가지도 구체적인 혁신 방안은 내놓지 못하는 우리 진영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말로는 새로운 전략 전술 수립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옛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합법투쟁 경시, 공개운동 경시, 비밀지하조직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그 영향이다. 인도로 갈 수 있어도 차도로 행진하고, 아무 성과도 없이 시위하고, 집회하는 것도 모두 그 여파다. 심지어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비합법적으로 했다. 92년에도 대학교에 가보면 인도로 행진한 것을 기회주의라고 비난한 홍보물을 볼 수 있었다. 요즘도 집회 신청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한결음 더 나가서 경찰의 탄압을 유도해낼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대중을 설득하는 것 대신 스스로 정부의 탄압을 불러들여 영웅적으로 투쟁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 자세면에서는 대단히 훌륭하지만 운동면에서는 소영웅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한총련이 발족식을 하면서 원칙없이 과격시위를 하다가 대중들로부터 지탄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활동가들은 그것을 혁명적이라고 생각하고 따라하기 위해 애쓴다.

"경험없는 혁명가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부르주아지는 합법적 투쟁 과정에서 특히 자주(혁명 시기가 아닌 평화 시기에는 더욱이)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였으므로 합법적 투쟁수단은 기회주의적이며 비합법적 투쟁수단이야말로 혁명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 그러나 혁명가로서 비합법적 투쟁형태를 합법적 투쟁형태와 결합시킬 줄 모른다면 그런 혁명가는 극히 졸렬한 혁명가이다."<sup>4)</sup>

3) 당시 8월 1일에 한신대학교에서 열린 노동자 수련회에서 이미 민중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도 실제로 그 주장이 확산된 것은 한 참 후였다.

4) 레닌, 좌익소아병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과거에 너무 목을 매달고 있다. 러시아는 러시아고 중국은 중국이며 1970년대는 1970년대다. 여기는 한국이고 시대는 1990년대다. 우리는 객관적인 현실을 충실히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러시아로부터, 혹은 일제시대 사회주의 운동에서 찾고 있다. 혁명 전략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허용된 유일한 정답은 무장봉기노선 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객관적인 상황마저도 무장봉기노선에 맞춰 재구성했다. 우리는 우리 사회를 파악할 때 알게 모르게 절대적 빈곤 개념에 매달렸다. 대통령선거 때나 집회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연설할 때 사용하는 단골 단어가 있다. 저임금, 장시간노동, 지하월세방, 농민의 자살, 죽음을 부르는 철거, 벌방 등이다. 물론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지금도 있는 일들이니까 잘못 선택된 단어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 1970년대부터 계속 써오던 단어로 변화된 사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단어들이다.

사회는 이미 1970, 80년대와 바뀌고 있다. 1970, 80년대는 봉제공장, 전자공장, 마창수출 자유지역의 여성노동자가 주력을 이루는 조립 가공이 중심이던 시대다. 1990년대는 재벌에 맞서는 중공업 노동자들이 사회의 주력을 이루고 있다. 또 사무직 서비스직 노동자가 제조업 노동자의 수를 능가하고 있는 시대다. 비공식 조사지만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의 10% 정도가 자가용을 갖고 있는 시대다.

우리가 재벌이 지배하는 사회체제를 깨려면 대기업 노동자의 정서에 기초해서 이론을 만들고 투쟁전략을 만들고 연설문을 써야 한다. 감상적으로 표현하면 운동의 중심은 20대 여성 노동자에서 3, 40대 남성노동자로 옮겨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 나라 노동자는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한다. 농민들이 수입농산물 때문에 시달리는 것도 맞다. 빈민들이 정부의 재개발 정책의 혜택을 못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근로대중의 생활이 어렵다고 해도 밥먹고 사는 일이 급할 정도는 아니다. 절대적 빈곤은 사라진 것이다. 무의탁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을 예로 들어서 사회를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 부르주아 경제 질서가 정착되다시피한 우리 사회지만 여전히 소작농도 있을 수 있고 가내수공업 공장에서 봉건적 수탈을 당하는 노동자도 있지만 그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설에서는 전형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경제나 정치도 마찬가지다. 전형을 기초로 해서 전략도 짜고 작전도 짜야 한다.

그런데도 민중진영은 모든 사람이 집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거라고 생각하고 주장한다. 그러다보니 대중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민중진영은 "여러분! 살기가 힘들지요"하는 말로 연설을 시작하는 게 습관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그렇게 인사를 하면 자기에게 하는 인사라고 생각하는 청중은 이미 얼마 되지 않는다. 인사가 통하지 않으니 다음 이야기는 귀에 들어올 리가 없다.

우리 나라 민중의 고통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에서 온다. 아무리 벌어도 높아진 소비수준과 사회적 평균 생활비용을 따라가지 못하는데서 온다. 그리고 운동의 주력은 대기업의 3, 40대 노동자에게로 옮겨갔다. 그런데도 운동은 절대적 빈곤개념에 매달려 있다.

대개의 선전물, 대개의 홍보물은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마치 부르주아 정부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글을 쓰거나 노동자들의 투쟁이 당장 혁명적 투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써댄다. 절대적 빈곤 상태에서는 그게 맞다. 누가 봐도 나쁜 놈하고 싸우고, 이대로 살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을 때는 불만 불이면 타오르지만 상황은 바뀌었다.

(4) 대담하게 선거로도 집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민중봉기 노선을 채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민중봉기 노선을 채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혁명운동은 상황을 만든다기보다 객관적 조건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 것이다. 짜 놓은 전략과 전술에 상황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된다. 민중봉기 노선을 택해놓고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이 민중봉기 노선을 요구하면 민중봉기 노선을 채택해야 하는 것이다. 민중봉기 노선을 채택할 수 없으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한다. 앞에서 우리는 사회주의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다. 사회주의로 가는 길은 무장봉기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선언해야 한다. 선거로 집권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대중을 조직하고 대중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아서 선거 이후에 있을 부르주아의 불법 행위를 진압할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선거로 집권할 수 있다고 하면 투항주의라고 비판한다. 그런 비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의 객관적인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이론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면 곧 바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실천을 하지도 못하면서 비밀지하조직만을 꾸리고, 무장봉기를 말로만 준비하는 형편으로 이 주장을 비판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선거에만 목을 매는 행위에는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1970년 칠레에서 선거로 집권한 칠레의 아옌데의 예를 특수한 예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민중항쟁 노선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면 선거로 집권하는 방법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대중의 힘을 조직하여 선거에서도 이기고 대중투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사실은 선거로 집권할 수 없으면 무장항쟁으로도 집권할 수 없다. 동시에 선거에서 자기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조건인데도 무장항쟁을 주장할 수는 없다. 선거에서도 근로대중이 사회주의자를 지지하고 그것을 두려워한 지배계급의 불법만행에 따른 대중들의 조직적 저항이 결합되면 상황은 다시 민중항쟁 노선으로 나가게 되겠지만 선거를 아예 무시하는 민중봉기 노선을 거의 무의미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의 우리 나라에서는 선거를 적극 대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1993년 오늘 우리 사회주의 운동 진영은 1995년 선거를 대비하는 게 현실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95년 선거 대비가 중간고사여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대중투쟁을 중시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중투쟁을 중시한다는 것과 선거투쟁을 중시한다는 것이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은 1987년 대통령선거, 1988년 국회의원 선거, 1992년 지방의원선거, 광역의원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에서 입증되었다. 우리는 선거 때 마다 민중후보를 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1년 6개월 후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중간목표를 1년 6개월 후의 선거라고 분명히 못박을 필요가 있다. 물론 우연한 사건으로 선거를 못치를 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목표는 선거대비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선거 대비가 아니라 힘에 맞게 한지부마다 한 명씩 기초의원이라도 당선시킨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기왕 선거에 대비한다면 열심히 대중투쟁 하는 것이 선거대비라는 식이 아니라 대중투쟁의 결과를 선거 승리로 만들어 간다는 적극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

지금 사람들은 대단히 어정쩡하다. 민중항쟁 노선을 고수하지도 않으면서 선거대비도 하지 않는다. 우리들에게 절충은 대체로 멸망의 길이다. 당장 민중항쟁 노선을 채택할 게 아니면 실제로 할 수 있는 투쟁 전술을 채택해야 한다. 특히 대중투쟁한다면서 완전히 공장사업



만 매달린다거나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오류다. 그런 활동 방식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공장에만 매어두는 또 하나의 편향이다.

### 3. 대중노선을 강화하자

우리가 고쳐야 할 사업상의 문제점 중 또 하나는 대중노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 (1) 대중 노선을 이탈한 주장

지금까지 사회주의 진영이 내세운 요구는 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요구 혹은 선진 노동자나 선진 대중의 요구였다. 그런 면에서 전형적인 요구가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3자 개입금지, 복수노조 허용,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보장 등이다. 지난 87년 이래 금융실명제 실시, 토지관련 3대법안 쟁취, 조세제도 개혁, 주택문제, 환경문제 등을 내걸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 집회를 한 적은 거의 없었다. 남이 하면 따라 한 적은 몇 번 있었다. 반면에 전두환-이순자 처벌 촉구, 광주항쟁계승, 6월항쟁계승, 11월 민중대회, 노동자 대회 처럼 주로, 아니 거의 전적으로 사회주의 진영이 대중의 요구는 핑개치고 구호 중심의 정치적 사건에 매달렸다. 유일하게 노동운동과 관련해서는 임금인상투쟁지원도 있었지만 그외에는 없었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아서 괴로운 사람은 사회주의자와 아주 선진적인 대중이다. 양심수도 마찬가지다.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아서 괴로운 사람도 아주 소수다. 전노협 간부들이나 사회주의자는 괴롭겠지만 일반 조합원들은 복수노조가 인정되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지는 않는다. 약간은 고통을 느낄지 모르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3자개입이 금지되어서 속이 상하고 활동이 위축되는 사람도 사회주의자나 극소수의 선진적인 노동자들이다. 노동조합 차원에서 정치활동을 하려는 바램이 아직은 일반 조합원 사이에서 그다지 높지는 않다. 이들 사안은 너무나 우리를 구속하고 또 그만큼 우리는 쟁취하거나 타개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중의 절실한 요구는 아니다.

물론 사회주의자는 대중의 이익을 대변해서 싸우고, 선진 노동자도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여 사회주의 지도자와 노동운동지도자를 구출해내는 것이 대중의 이익을 장기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모르는 않으나 지금 대중들의 상태는 우선 그렇게 지도자를 구출할 결심도 필요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이다. 대중의 필요성이 강하지 않으면 그런 투쟁을 전면으로 내세울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이 바람이 아니라 태양이듯이 우리는 대중운동을 강화하고 대중들이 우리 사회주의를 지지하게 만들어서 지도자를 구출하고 제반 악법을 타개할 필요성을 만들어내야 한다. 노동자들이 전노협으로 모이고 전노협 행사 하나하나가 위력적일 때 저들은 타협하려 하는 것이며 타협의 결과로 노동악법도 고칠 수 있다. 노동자들이 전노협과 함께라면 죽을마져 감미롭다는 말이 나올 때 노동악법은 고쳐지는 것이다. 선진 노동자나 사회주의자의 요구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결코 전면으로 내세울 방법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방법을 썼다.

이와 대비되는 것이 전교조의 활동이다. 전교조도 물론 합법화를 주장하고 해직교사 복직

을 요구하면 투쟁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교사의 지위향상 보다는 '아이들에게 참고 욕을!' 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콩나물 교실 해소, 촌지 거부, 전인교육 강화, 편애 금지, 체벌금지등 교육에서 민중성을 최대한 실현시켜서 대중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전교조를 합법화 시키는 것이 대중에게 유리하다는 인식을 이끌어 낸 것이다.

요구에서 대중적인 것을 내세우라는 것은 대중이 바라는 바를 한다는 소극적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봐도 당연히 대중들이 시급하게 요구할 것을 먼저 해결하라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대중이건 누구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문제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투쟁은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한 투쟁이 기본을 이뤄야 한다. 1993년 초 학술단체협의회에서 인하대의 정영태교수가 발표한 [노동자의 정치의식과 투표형태]라는 논문을 보면 '정치 민주화를 가장 급한 문제로' 본 국민은 11%에 지나지 않았다. 원래 정치라는 게 국민이 자유롭고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임을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주의자들이 내놓는 주장을 보면 때로는 황당할 때가 없지 않다. 즉 하반기에는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중심으로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거나, 통일투쟁을 중심으로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경우다. 비슷한 예로 광주학살 진상규명, 5.6공 부정비리 진상규명 등도 마찬가지 주장이다. 물론 이런 투쟁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경제문제를 둘러싼 노동계급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을 항상적으로 가장 앞에 세워야 하고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다른 문제가 제기되어도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투쟁에서는 금융실명제 즉각 실시 촉구투쟁, 재벌재산공개 촉구투쟁이 강력하게 벌어져야 한다. 11월 13일 노동자대회의 주제도 노동악법 철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나열하는 식이 아니라 위 요구를 내세우는 뚜렷한 투쟁을 형성해야 한다. 다만 정치조직의 입장에서는 지금 노동자와 워낙 연대의 고리가 약하므로, 그리고 운동의 중심이 워낙 흐트러져 있으므로 하반기에 '고용보험법 쟁취투쟁'을 벌일 수도 있으나 이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일이며 노동조합과 협의가 되면 어떤 것을 선택해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일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나 내년 하반기를 대비해서 사회주의 진영과 노동조합은 하청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활동에도 나서야 한다. 사실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중소기업의 기반이 튼튼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 형편으로 봐서 재벌들이 국제 시장에서 버티지도 못하는 주제에 중소기업을 돌볼 리가 만무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노동자가 재벌회사를 직접 소유하고 스스로 회생하면서 중소기업을 돌볼 때만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정상화 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73%나 되는 대재벌의 하청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노동계급이 중심이 될 때만 중소기업도 살고 나라 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지금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이 하청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그리고 담보없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기업활동을 할 수가 없다. 대기업 노동조합은 하청 중소기업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하청대금을 제대로 주도록 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노동조합은 중소기업에 경영참가 보장, 기업 공개를 요구하며 무리한 착취와 수탈에는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즉 우리 노동자가 정권을 잡은 후에도 중소기업의 활동은 보장하겠지만 정상적인 방법을 넘어서는 것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지금부터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정권을 잡은 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나가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반자본주의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개념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반자본주의란 자본주의에 반대한다는 것이고 일반적인 기업활동도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78대 기업, 혹은 30대 기업을 사회화 한다는 것은 반독점 전선을 구축한다는 뜻이다. 반자본주의 전선이라는 표현을 문민정부가 되었다고 해서 아무 생각없이 써서는 곤란하다. 반독점투쟁은 사회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하는 최저강령의 의미가 있는데 반자본주의 투쟁은 최고강령을 현실의 과제로 제기하는 무리한 요구가 된다.

어쨌든 이처럼 대중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청하는 경제에서 민중적 요구를 내세우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나 사회주의 합법화 투쟁을 뒤로 돌리는 것은 경제주의라는 주장이 있는데 충분히 토론될 일이다. 당연하기에 할 말은 아니지만 경제에서 민중적 요구를 내세우고 투쟁한다고 해서 정치적 문제에 손을 놓을 사람 없고, 설사 사회주의 합법화를 내세운다고 해서 경제문제에는 손을 뗄 사람도 없다. 다만 순서를 두고 중점을 둔다면 다를 뿐이다.

여기서 경제주의라는 지적에 간단히 답변한다면 다음과 같다. 노동자의 관심을 경제문제에만 제한하지 않는 한, 그리고 노동자의 관심을 노동운동에만 맞추지 않는 한 문제될 것은 없다. 계속 문제제기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는 놓아두고 사회주의 합법화나 국가보안법 철폐나 통일투쟁으로 달려가는 운동방식이다.

## (2) 대중노선을 이탈한 투쟁 전술

시위 만능주의, 흠집내기 시위 따위도 사실상 대중노선을 이탈한 투쟁이다. 무조건 싸우면 된다는 식의 활동이 과거 민중항쟁 노선의 영향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것임은 앞서도 지적한 바 있다.

민중항쟁 노선을 고수하다 보면 상황도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보인다. 어떤 노조에서 파업이 벌어졌다는 보도가 나면 마치 혁명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보고가 되거나 당장 지원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조직에 동원령을 내리는 것도 일종의 대중노선을 이탈한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결과다.

우리 민중정치연합의 5, 6월 사업을 평가해보자 그렇다. 5월 투쟁기간 설정, 6월항쟁 기념 투쟁기간 설정, 청와대 방문, 전해투농성 지원투쟁, 금융실명제 실시 촉구 위원회가 매주 토요일 마다 하기로 한 선전전에 참여하기로 결정 등을 할 때마다 마치 조직을 총동원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고 나서 평가해보면 제대로 한 것이라고는 6월 10일 명동에서 열린 6월 항쟁 기념행사에서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연극한 것 뿐이다.

앞에서 요구조건이 주로 정치적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는 대중노선 이탈을 지적했지만 집회나 시위에서도 대중노선을 이탈한 것은 명백하다. 그 증거는 사회주의자 집회에는 핵심 사회주의자의외에는 전혀 동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투쟁을 계획할 때 가장 첫번째로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 당연하고, 당연하고, 또 당연하게도 투쟁의 주체는 대중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다. 지금은 누가 보아도 나쁜 놈과 싸우는 게 아니다. 대중이 참여하지 않는 집회와 시위는 이불 속에서 활개치는 꼴이다.

그런데도 민중진영은 재미도 없고 지루하기만 한 집회를 자주 열고 시위도 자주한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계획을 많이 잡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계획에 반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제출될 때 투쟁계획이라는 이름이 붙는 계획에 반대하면 마치 싸움을 앞두고 꼬리

를 빼는 사람으로 지목될까봐서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정치조직도 마찬가지지만 싸움하는 의견 앞에서 싸우지 말자고 하는 사람은 늘 비겁하다고 찍힐 위험이 많다.

이런 경향 때문에 1989년, 90년, 91년에는 연속적으로 전노협에서 5월 총파업 지시를 내렸고 한번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기도 했다. 동시에 민중진영은 3, 4월이면 임금인상투쟁, 5월이면 광주투쟁, 6월이면 6월투쟁, 8월이면 통일투쟁, 11월이면 전태일정신 계승투쟁 등 전투로 날이 새고 전투로 날이 저무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결과는 신기하다. 그렇게 많은 구속자를 내고, 그렇게 많이 헌신적으로 싸웠는데 시위도 안하고 집회도 안하는 민주당보다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고, 경실련 등에도 뒤지는 것이다.

이유는 뻔하다. 대중의 정서와 맞지 않는 투쟁을 벌이고 집회를 열기 때문이다. 대중은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집회와 시위를 벌이기 때문이다. 요즈음은 전투경찰이 막지 않아도 시민들이 참여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달에 한번은 시위할 계획을 세우고, 집회할 계획을 세운다. 그것도 대중들과는 상관없는 주제를 가지고.

대중은 관중이고 운동권은 선수인, 구조는 잘못되었다. 대중은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가 나서서 싸우는 것은 잘못이다. 마르크스가 발견한 소중한 성과 중 하나가 역사의 주인은 대중이라는 것이다. 우리들 투쟁의 주인도 대중이다. 대중이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가 나서서 싸울 근거는 전혀 없다. 우리는 대중들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지, 대중이 우리 뜻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대중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 뛰쳐 나가서는 안된다. '한 사람이 열 걸음 가는 것 보다 열 사람이 한 걸음 가는 것'이 소중하다고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뛰쳐나가서는 안된다. 설득을 해야 하고 반드시 같이 움직여야 한다.

물론 답답할 수도 있다. 도대체 재벌들이 착취 수탈하는 것을 다 아는 우리가 보기에는 대중들이 멍치면 그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싶겠지만 답답한 것은 우리일 뿐이다. 이러한 대중들을 일깨우고 투쟁의 중심이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임무이지 이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것이 우리 임무는 아니다.

요즈음도 5월달이 되면 5월 대회를, 6월이 되면 6월 대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 대회를 할 때 과연 대중들이 참여를 할 것인가? 문제는 그것이다. 우리 주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장을 대중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중에게 욕을 바가지로 퍼붓는다고 속이 후련해지겠는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내용이 옳은지를 다시 돌이켜보아야 하고 전달 방법은 틀리지 않았는지를 돌이켜 봐야 한다. 한두 명의 대중이 동의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많은 대중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 4. 정치를 복원하자

우리가 고쳐야 할 점 중 또 하나는 '정치'의 개념을 정확하게 세워내는 것이다. 정치의 개념을 정확하게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정치라고 하면 경제나 문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는데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은 정치는 경제가 집약된 표현이라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정(政)이란 정(正)과 같은 뜻이다. 내 백성을 고루 살게 하는 것이다. 어지하여 토지의 이익을 겸병하게 하여 부한 사람을 더 부하게 하고, 토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여 가난한 사람을 더 곤란하게 할 것인가? 토지와 농민을 계산하여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바르게 하는 것이 정치이니 백성을 고루 살게 하는 것이다” 5)

우리 활동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결합시켜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경제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경제투쟁을 아예 방기해버렸다. 우리의 사회주의 운동을 보면 노동조합 운동과 그야말로 5,6공 청산이니 국가보안법 철폐니, 전두환 이순자 구속 수사 촉구니 하는 문화나 경제에 대비되는 정치운동만 있었다.

사실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이데올로기 투쟁은 동시에 벌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투쟁을 하는 것을 경제주의로 치부하는 경향도 있었다.

#### (1) 운동 영역을 넓혀야 한다

우리 운동에는 노동조합의 임금인상투쟁과 파업투쟁 지원 그리고는 광주항쟁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같은 정치적 쟁점을 따라다니는 운동 밖에 없다. 이미 우리 사회는 어린아이까지도 탄광에서 갱차를 끌어야 하고 가장이 벌어오는 돈으로는 가족들이 굶어 죽는 것을 지켜 봐야 하는 산업자본주의 초기 사회가 아니다. 절대적 빈곤이 해소된 사회다.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공장에만 갇혀 있지 않다. 전노협의 조사를 봐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만 합한 비용이 최소한 생계비의 35%를 차지한다. 회사 안에서의 임금인상만이 아니라 바깥 사회에서 들어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 당연히 공장 바깥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주의운동이라고 하면 ‘노동조합 운동 더하기 정치구호 외치기’로 여기는 풍토가 있었고 그러다보니 사회가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다. 나아가 노동자들이 계급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비난을 들을 소지를 안고 있었다. 다만 현실에서 노동조합이 공장외의 활동에도 폭넓게 참여하려면 사회주의 정치조직이 능동적으로 활동해야 된다. 그런데 사회주의 조직은 노동조합운동에 깊이 들어가버리고 노동조합운동을 포함한 폭넓은 정치투쟁을 벌이지 못하니 문제가 된 것이다.

#### (2)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경제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가 매 맞는 여성을 구해야 한다고 외치기만 할 때, 여성의 전화에서는 매 맞는 여성들이 실수 있는 「쉼터」를 운영한다. 우리가 자본주의는 공해를 양산한대요 하고 고발만 하고 있을 때 환경문제연구소 등에서는 악수터 수질을 검사해주고, 환경운동을 벌인다. 우리 사무실에서는 사무실 내 환경운동 같은 것은 시시해서 벌이지 않는다. 또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 처벌을 외칠때 경실련에서 금융실명제 실시 촉구를 위한 시위를 벌이고 토지공개념 입법 운동을 벌인다. 우리는 노인문제를 떠들면서도 양로원 방문도 안한다. 일하는 여성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조직적으로는 아무 대안이 없다. 범죄와 전쟁한다는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마을의

5) 정약용, 여유당 전서 제1집, 제10권 원정, 정진석, 「다산 정약용의 철학사상」, 「다산 정약용」, 68쪽, 1989년 푸른숲 출판사

## 한국자본주의의 진단

1. 한국자본주의의 발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항상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상정된다. 그런데, 이때 무엇을 축으로 한국자본주의를 바라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생산력의 발전단계에 따른 관점, 정치권력 위주의 사고방식, 『자본』에 기반한 고전적인 노동과 자본의 관점 등이 존재한다. 이들이 가지는 한계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의 독점자본주의의 재생산이라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독점자본주의의 재생산이라는 문제를속에서 한국자본주의를 사고할 때, 등장하는 주요한 두 축은 고전적인 그렇지만 여전히 유효한 종속과 독점이라는 축이다. 한국자본주의는 종속과 독점을 축으로 재생산되고 있고 그 속에서 매 시기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순환에 매개되어 형태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형태변화를 고찰함에 의해서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을 획득할 수 있다.

2. 현재의 한국자본주의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는 한국자본주의의 발전사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한국자본주의의 형성이라는 문제는 고전적인 이론적 문제까지를 포함하여 많은 실증적인 연구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한국자본주의의 본격적인 전개 시기랄 수 있는 1960년대 이후의 발전사에 대해서만 고려하도록 한다.

미국자본주의의 쇠퇴와 이에 따른 원조경제의 파탄, 5.16으로 표상되는 파시즘의 성립, 차관경제로의 진입과 함께 세계자본주의로의 편입을 피하는 경공업수출산업화와 이에 따른 경공업독점자본의 형성이 1960년대의 한국자본주의를 특징지우는 것이었다.

우선 파시즘이라는 강력한 추진세력의 형성을 기반으로 1960년대 중반 이래 미국과 일본을 양 축으로 하여 차관도입과 생산수단도입을 통해 선진자본주의국의 생산력을 이식받고 섬유산업 등의 노동집약적인 소비재 경공업상품을 가공수출하는 재생산구조의 창출이 시도되었다. 1) 가공수출산업체계에서는 자본축적을 위한 생산수단을 해외에 의존할 뿐 아니라 상품가치의 실현 역시 상당부분 해외시장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소위 수출의 가격경쟁력은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경쟁력은 국내적으로는 가능한 한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임금의 논리가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2)

차관을 통한 수출산업화속에서 국내의 개별 자본은 차관도입권을 획득하는 것은 -이것은

1) 이 시기는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일본자본을 비롯하여 차관형태의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 들이는 상황이었다. 이는 박정희의 정치력보강 - 즉 1960년대 초반까지 형성되었던 자본가 계급의 지배질서 공고화 - 이라는 의미 역시 가지는 것이다.

2) 당시의 열악한 노동상황은 전태일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해외의 신규설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국내자본의 축적력이 취약하고 설비도 열악했던 상황에서 그것 자체만으로도 국내시장과 산업을 독점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으며, 차관계약이 일단 체결되면 그 다음은 국가가 내자를 동원하는 등 지원을 해 주었으므로 자본간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독점자본의 형성은 이러한 과정에서 가능한 것으로 이들은 경공업에서의 생산의 집적과 자본의 집중을 기초로 그 경제적 지배력을 강화하여 갔다.

이 시기부터 한국자본주의의 형태변화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본주의의 산업순환을 본격적으로 겪게 된다.

### 3. 1970년대의 한국자본주의

1960년대 말-1970년대 초 선진국자본주의는 1950-60년대의 장기적 호황국면을 끝내고 침체국면에 진입한다. 이러한 상황을 가속화시킨 사건은 1973년의 제1차 오일쇼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피를 위해 선진국 자본은 자국시장에 대해 보호주의장벽을 구축하고 산업재편 즉 기존의 포드주의적 중화학공업에서 에너지절약형 첨단산업으로의 이행이 단행된다. 이 과정에서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체제에 입각해 있는 중화학공업은 주요 선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시킨다.

한편, 1960년대의 경공업수출산업화는 선진자본주의국의 보호주의장벽의 강화라는 조건에 부딪혀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그것이 현상화되는 것이 1960년대말과 1970년대 초의 불황이었다. 이에 대한 국가와 독점자본의 대응은 유신체제라는 파시즘체제의 공고화와 경공업수출산업화의 중화학공업수출산업화로의 이행이었다. 파시즘체제의 공고화는 한국의 독점자본은 강화하고 이러한 질서를 민중을 비롯하여 비독점자본에게까지 강요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서의 공고화속에서 중화학공업에 대한 대규모투자가 감행된다. 그런데, 실상 이 과정은 선진국자본으로부터 대량생산 가공조립형 중화학공업설비와 그에 체현되어 있는 생산력을 적극적으로 이전받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이전을 통해서 경공업에 독점화되어 있던 독점자본은 축적의 영역의 확대를 위해 중공업에 적극 진출하고 중화학공업분야에서 해외의 설비를 이전받아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새롭게 진행된 축적영역에서 독점의 강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생산영역에 대한 확대와 더불어 이 시기는 독점제벌의 비관련다각화(문어발식 확장)가 본격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불완전한 대량생산방식의 이전과 독점자본에 의한 과잉축적은 제2차 오일 쇼크로 인한 선진자본주의의 침체의 가속화라는 상황속에서 대응력의 상실이라는 형태로 한계에 봉착한다.

### 4. 1980년대의 한국자본주의

한국자본주의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반에 이르는 장기화되고 심각한 공황 및 침체국면에 돌입한다. 이러한 침체국면은 한국자본주의의 성립 이래 가장 심각한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국면은 독점의 강화와 개방화라는 미명 아래 세계자본주의로의 적극적 편입을 가져온다. 가공조립형 중화학공업을 성장산업으로 규정하고 이 영역에서 1970년대 도입한 대량생산체제를 합리화·확충하면서 독점자본의 지배력을 강화시킨다. 이와 함께 비독점자본을 독점자본에 계열화시킴으로써 대량생산체제의 물적인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도 이 시기의 일이다. 개방화정책은 이 시기 이러한 자본의 재편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대량생산체제를 198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확립한 한국의 독점자본은 선진자본주의국들의 불균등발전의 산물인 1985년의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소위 '3저'(저유가, 저달러, 저금리)라는 호조건을 맞이한다. 이러한 호조건은 대량생산체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이에 따라 수출의 급증과 생산 및 축적의 급증으로 1986-1988년 3년은 이전의 어느 시기에 못지 않을 호황을 구가한다.<sup>3)</sup>

이러한 호황국면에서 1987년 5공화국이라는 파시즘의 폭압과 노동에 대한 무제한적인 억압이 가지는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한다. 즉 5공화국 말기에 정치적 이완기와 사회적인 변화의 분위기 속에서 노동계급이 대규모로 파업을 감행하면서 조직화를 달성한 것이다.

### 5. 1980년대 후반 이래 최근의 동향

1980년대 후반은 3저에 따른 고도성장기와 그에 뒤이은 침체국면의 지속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대량생산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황이 반전됨에 따라 1989년 들어서는 침체의 국면으로 반전되는 것이다. 이 시기는 대량생산체제에 따른 대량물량확보-대량수출의 방식이 더 이상 종속적 자본주의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독점자본은 대량생산체제에 안주하면서,<sup>4)</sup> 내수를 지향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 내구소비재의 대규모 보급은 1987년 이래의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함께 이러한 배경하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반면에 비독점 경공업산업은 이 시기에 아시아에서의 자본주의발전의 촉진으로 한국의 자본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쟁의 격화 및 소위 고부가가치화로의 장에 의해 급속히 몰락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한국자본주의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방향은 선진자본주의국에서처럼 유연생산이나 다품종 소량생산체제가 아닌 대량생산체제의 강화 혹은

3) 이 호황국면을 계기로 한국자본주의가 변화하였다는 식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자립화의 경향이랄지 종속약화 심지어는 중진자본주의의 편향까지 등장한다.

4) 그러나 실제로 종속적 독점자본주의가 이러한 체제를 탈피할 수 있는 비전이 있는가는 대단히 의문이다. 이에 대하여 최근의 한국자본주의연구의 일각에서는 종속적 자본주의에서의 자국내에서으 잠재적인 축적증력 혹은 기술능력의 강화를 주장하는 논자도 존재한다.



대량물량확보-대량수출의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3년은 미국자본주의 정확히는 미국계 초국적기업의 의도가 여타의 자본주의국의 의도에 의해 굴절되면서 관철되었던 UR의 타결이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이 시기 이래 논의되는 구호는 '전세계적인 경쟁의 격화'와 '국제경쟁력'이었다. 이러한 구호는 앞서의 구조조정 즉 중화학분야 대량생산체제를 담당하는 독점자본의 강화, 이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세계 자본주의로의 적극적 편입을 의미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 자본주의국가와 복지정책<sup>1)</sup>

### I. 서론

한 사회 구성원의 복지가 전체 사회의 제도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국가가 사회복지 제도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기 시작한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일정 정도 발전한 이후이며, 더 나아가 자본주의 국가에 의한 광범위한 사회정책의 실시로 특징지워 지는 소위 '복지국가'는 2차대전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복지국가는 많은 경우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상의 사회형태로서 제시되고 있으며, 발전 도상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 나라가 지향해야 할 하나의 모델로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70년대말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에 잇따라 80년대를 넘어서면서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 자본주의 각국에서는 신보수주의의 등장과 함께 그간 확장되어 오던 복지분야의 사회적 지출은 삭감되었고, 복지국가는 그것의 반대자들에 의해 자본주의의 위기를 야기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혹독하게 비판되었다. 그리하여 복지국가의 위기론이 등장하였다. 주로 신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진행된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은 그러나 해당 사회의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실제로는 복지 지출이 극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sup>2)</sup> 이는 반대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는 - 적어도 구미의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 하나의 필수불가결한 사회제도로서 정착되었으며, 찬성, 반대와 무관하게 하나의 현실이 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노예제, 봉건제, 자본제 등의 역사적 형태규정성과 무관하게 복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념규정을 한 후, 자본주의사회이론과 관련하여 복지의 자본주의적 형태를 명확히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의 사적유물론적인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일단 국가에 의한 복지정책을 그것에 대한 옹호나 비판과 무관하게 자본관계에 내재적인 모순의 결과로서 개념화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복지국가는 사실 그 출발부터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복지국가의 전형적인 예로 등장하는 영국의 경우 이차대전 중 한편에서는 같은 자본주의 국가인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즘적인 정치형태로부터 스스로를 구분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같은 연합국에 속했

1. 이 글은 한신대학교, 사회복지연구 제2호(1994)에 실린 글이다.

2. 국가의 개입없는 자유로운 자유경쟁 시장체제로의 복귀,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지출 축소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개입의 축소, 민간부분의 역할 증대 등을 소위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신보수주의정권의 등장 이후 영국 정부의 사회비 지출의 변화를 조사한 김상균에 따르면, 1979/80년 이래 공공주택서비스를 제외한 NHS, 노령연금, 실업급여 등 기타부분에서 복지 지출은 감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완만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상균, 1994) 이는 영국 뿐 아니라 독일을 위시한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일반적인 경향이다. "신보수주의적인 [복지국가의] 해체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가부분의 사회적 서비스의 본질적인 감축은 발전된 복지국가중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단지 1974년 이래 1984년도에 해당 국가들의 복지 지출의 실질적 증가가 둔화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비록 그 성장 속도는 감소하고 이전 보다 더 세밀한 감독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Krätke, 1990: 675)



지만 체제를 달리하는 구 소련의 사회주의로부터 스스로를 구분하는 의미에서 복지국가론이 제창되었다. 즉, 한편에서는 파시즘, 다른 한편에서는 코뮌니즘과 구분되는 하나의 이즘으로서 보통 복지국가가 제시되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흔히 (부르주아적) 민주주의가 복지국가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이때 복지국가 자체가 하나의 완성체로서 역사의 마지막 형태인 것처럼 제시됨으로써, 복지국가로의 전환 이후에도 모순들이 남아있으며,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복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거꾸로 돌려질 수 있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점이 간과되었다. 다른 한편 일종의 무역사적 존재로서의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는, 자본주의의 등장 이래 자본주의적 생산의 모순적 발전과 맞물려서 전개된 사회복지분야의 발전과 복지국가의 관계, 또 복지국가로의 형태전환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자본주의적 모순의 지양과 관련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정책을 분석하는데 있어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론 및 국가론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복지정책을 살펴 봄으로써 우리는 자본주의적 모순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의 모순이 지양된 미래사회로의 이행전략속에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의 복지활동을 위치지을 수 있을 것이다.

## II. 복지의 원칙: 상호부조, 사회적 필요

복지란 무엇보다도 상호부조의 원칙에 입각해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필요(social need)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일단 사회적 필요의 개념을 명확히 한 후, 이를 상호부조의 원칙과의 관련 하에 설명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개념규정을 하고자 한다.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사회적 존재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의, 식, 주 등 스스로를 물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며, 이에 더해 해당 사회의 분업 구조에 적합한 정신적, 육체적인 생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가족을 형성하여 대를 이어 사회의 구성원을 재생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적 필요는 어느 사회에서나 일단은 일상적인 생산활동을 통해 충족된다. 노예제 사회, 중세유럽의 봉건 사회, 아시아의 왕조 또는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를 불문하고 어느 사회나 그 방식에서는 서로 차이난다고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통해 재화를 생산하고, 생산한 재화를 분배하며, 분배된 재화를 소비해야만 그 사회가 기본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었다.

이때 재화의 종류는 해당 사회의 형태적 차이에 불문하고 크게 보아 직접적인 생산자계급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을 기본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한 생필품과 함께 원칙적으로 소수의 지배계급만이 향유할 수 있는 사치품이 생산되어 왔다. 사치품의 경우는 분명히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사회에서든 복지에 대한 논의에서 일단 제외된다. 생필품의 경우 대부분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되고 소비되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복지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볼 때 노동의 대가로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화를 획득하여 소비할 경우 우리는 그것을 복지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노예계급이나, 중세시대의 농민이나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자계급이나 경제적인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경우, 그것이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복지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복지는 이와 같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필

요로 되는 것이어서 일단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구분하여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시스트 이론을 토대로 복지분야에서 활발한 이론활동을 하고 있는 Gough는 그러나 경제와 복지의 구분없이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활동을 그것이 노동력의 재생산을 용이하게 하고 비생산 활동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사용하는 측면에 기초하여 그의 이론을 전개함으로써(1979: 44-49), 자본주의 사회의 복지가 단순히 자본관계의 재생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그치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특징은 그러나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경제적인 가치법칙의 관철을 매개로, 즉 임금관계에 기초하여 기본적인 계급관계가 재생산되는데 있다.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국가의 복지적 개입이 왜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되는지는 거꾸로 기본적으로 경제적 관계를 매개로 진행되는 계급관계의 재생산의 모순성에 그 원인이 놓여져 있다. 만약 이와 같은 모순성에 기초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의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리는 '임금'과 '복지'의 차이가 무엇인지 구분해 낼 수 없을 것이다(Fine/ Harris, 1976: 111). 실제로 Gough는 복지를 사회적 임금(social wage)으로 부르고 있으며, 사회적 임금을 위한 계급투쟁을 임금인상 투쟁과 구분없이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 복지에 대한 본질규정과 그것의 자본주의적 형태규정성을 규명함으로써만 우리는 복지와 임금의 차이를 구분해 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성과 관련하여 복지를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적 필요에 대한 논의에서 기존의 사회정책학에서는 사회적 필요에 대해서 흔히 자본주의 사회이론과 무관한 초 역사적인 이론을 전개해왔다(Taylor-Gooby/ Dale, 1981: 211-214). 즉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고 무한하지만, 기본욕구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이며 필수적인 것들의 최저 수준에만 적용되는 욕구를 의미하며, 사회적 욕구는 사회적으로 해결되는 욕구로서 사회가 단순한 농업사회에서 복잡하고 다원화된 산업사회로 바뀌어지면서 기본욕구의 충족이 힘들어지고 이에 사회복지가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김상균, 1987: 16-27). 여기에서는 사회적 필요의 충족이 자본주의적 관계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가 거꾸로 도외시되고 있는 바, 자본주의적 생산과 복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장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복지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필요의 개념에 더해, 생산-분배-소비의 경제활동의 외부에서 또는 그것과 병행해서 수행되는 상호부조의 원칙에 따른 복지활동을 상정해야 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제도적 접근에 따르면 사회제도는 주로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는 혈연(가족), 사회통합의 기능을 담당하는 종교, 생산-분배-소비의 기능을 담당하는 경제, 사회통제를 담당하는 정치, 그리고 상호부조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의 다섯 가지로 나뉘며, 상호부조를 위한 활동은 사람들의 필요가 다른 제도에 의해 충족되지 않을 때 시작된다고 한다.(Gilbert/ Specht/ Terrell, 1993: 3ff)<sup>3)</sup>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기능을 상호부조로 파악한 점은 그릇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기능주의적인 관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그 사회가 계급사회인 한 복지지는 계급적이라는 것이다. 복지의 대상은 그것을 '빈민'과 같이 비계급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피지배계급으로 구성된다. 사회복지가 잔여적인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발달해 있어 사회구성원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는 현대에도, 사회복지제도의 주된 대상은(산업예비군을 포함한) 노동자계급이며, 보편적인 사회보험의 경우에도 일정액 이상의 소득

3. 이러한 관점은 같은 저자들에게 의해 1974년도에 발간된 같은 책 초판의 p.6에 보다 명쾌히 표현되고 있다.



자는 제외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시 말하자면, 상호부조라 하더라도 귀족들, 또는 현대의 자본가들과 같은 지배계급 내의 상호부조는 복지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서로 상이한 사회형태 내에서 사회복지가 가지는 의미의 차이가 간과되고 있다. 사회복지가 심지어는 국가 이데올로기가 될 정도로 전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한참 발전한 이후이며, 이러한 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이론과 관련하여 복지의 자본주의적 형태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세계사는 복지가 잔여적인 것에서 제도적인 것으로 단선적 발전을 해온 것이 아니며, 여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발전과 맞물리면서 발전해 왔다. 복지와 경제에 대해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복지활동 역시 기본적인 경제적 생산활동과 맞물려 있어, 복지가 주어지는 형식 및 내용은 항상 해당 사회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의해 기본적으로는 규정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각각의 사회형태 내에서 경제와 정치 그리고 복지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사실 이론의 과제이다.

### III. 자본주의적 생산과 복지의 모순적 성격

역사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사회복지의 필수적인 사회제도가 되었다. 노예제 사회에서는 비록 노예노동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지더라도 노예의 상실은 곧바로 노예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재산의 상실로 이어진다. 노예의 구입시 노동력과 함께 그 노동력의 소유자인 노예를 그의 전 생애에 걸쳐 통제로 구입하기 때문이다. 중세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경작하는 농민의 공물(Tribut)과 부역노동(Fronarbeit)을 영주가 취함으로써 착취가 이루어졌다. 봉건적인 토지소유에 기초한 경제외적 강제와 신분적인 지배 예속관계가 잉여노동이 유출되는 지배적 형태였기 때문에, 농민의 존재는 곧 그 농민이 소속된 장원의 부의 원천이었다. 따라서 직접생산자인 노예나 농민의 유지와 재생산은 착취자계급의 입장에서 볼 때 기본적인 경제적 재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특징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을 구입한다는 데에 있으며, 노동력의 가치인 필요노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고 잉여노동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노동이라는 사용가치를 자기것으로 함으로써 착취가 일어난다는 데에 있다. 즉 어떤 한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거나 해도 자본가는 그 노동자의 노동력만을 구입한 것이므로 동일 노동력을 가진 다른 노동자로 대체한 후 교체된 다른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에 대해 이전 노동자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주면 되기 때문에 자본관계내에서 볼 때 해당 자본가에게는 직접적인 손실이 아니다. 개별자본가의 입장에서 볼 때에 중요한 것은 '노동력'의 재생산이지 '노동자'의 재생산이 아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이전의 생산형태들에서와는 달리 생산자계급의 복지는 더 이상 직접적 생산과정의 필수적인 계기가 아니다. 그러면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국가정책으로서 복지가 전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의 증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그 사회에서 주도적인 생산방식을 이루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무어보다도 최대한의 이윤추구, 즉 타인 노동의 사적 전유를 통한 최대한의 가치증식으로 특징지어지며, 이때 자본-노동 사이의 자본관계를 매개로한 자본의 자기가치증식과정은 동시에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과정이다. 최대한의 잉여가치(자본의 입장에서는 이윤)의 생산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직접적인 목적이다.

이 문제 [임금상승을 통해 임노동자의 착취관계가 지양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논쟁에서 사람들은 흔히 중요한 점, 즉 자본주의적 생산의 종차(differentia specifica)를 간과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노동력은 그것의 봉사(Dienst) 또는 생산물을 통해 구매자의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매되는 것이 아니다. 구매자의 목적은 자기 자본의 가치증식, 즉 그가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은 노동을 포함하고 있는 상품의 생산, 말하자면 그가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품판매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가치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상품의 생산이다. 잉여가치의 생산 또는 이윤 남기기(Plusmacherei)는 이 생산양식의 절대적 법칙이다 ([ ]안은 필자) (Marx, MEW 23: 647).<sup>4)</sup>

자본-노동 사이의 자본관계를 매개로 자본의 축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자본주의적 생산을 그것의 본질이 아닌 다른 어떤 것, 즉 단순히 돈이 많은 것(화폐) 또는 자유로운 시장(상품) 등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본주의적 생산을 상품 또는 화폐와 관련된 범주로서 설명함으로써 자본가계급에 의한 노동자계급의 착취관계로서의 자본관계의 본질을 가리려는 시도는 자본주의 초기부터 있어왔으며,<sup>5)</sup> 이는 복지에 대한 논의에서도 역시 나타난다. Wilensky는 자본주의를 자본의 지배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경제체제라고 지적하였지만, 이어서 자본은 "현재의 산출 부분의 축적이며, 이 산출은 소비를 통해 다음번의 산출을 가져온다"(Wilensky, 장인협 역, 1979: 20)고 쓰고 있다. 나아가서 그는 기계화, 화폐경제, 회계, 상업화, 안정된 정치질서, 임금제도 등을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특징은 (구)소련과 같은 나라들에서도 볼 수 있어 모든 산업사회에 공통적인 것이라고 한다(ibid.: 20-21). 그는 자본주의 사회를 산업사회와 동치시키고 있으며, 자본주의 문화는 개인주의와 자유시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쓰고 있다.(ibid.: 8-24) 이와 같이 자본을 자본주의적 관계와 무관하게 모든 산업사회에 공통적인 범주로 이해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의 발전을 산업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해 (다분히 단선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Dale, Gilbert, Esping-Andersen 등의 이론가들도 상품생산과 자본주의적 생산을 동일시하고 있는데, 자본주의 경제를 '시장'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것으로, 복지국가는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Taylor-Gooby/ Dale, 1981: 143ff.; Gilbert, N., 1983; Esping-Andersen, 1990). 그 이론적 귀결은 일종의 탈상품화전략으로서 복지를 보는 것이다(Esping-Andersen, 1990).

이미 지적하였듯이 가능한 한 최대한의 잉여노동의 착취는 자본의 내적 속성이다. 보다 많은 이윤은 이제 자본끼리의 외적인 경쟁에 의해 자본이 살아 남기 위한 절대적 명제가 된다. 그리하여 무제한의 잉여노동의 착취를 향한 자본의 운동에 굴레를 씌우지 않으면 노동자계급의 존재가 통제로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자본가들은 개별적으로 노동자들의 '인간적 권리'를 지키고 싶어도 다른 자본가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4. 같은 책: 350, K III: 253f도 참조할 것.

5. 일찌기 마르크스는 상품순환의 추상적 범주들로서 자본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비판하였다.(Marx, MEW 23: 128) 크게 보면 마르크스의 자본분석 전체가 자본과 그것의 현상형태인 상품, 잉여가치와 그것의 현상형태인 이윤을 구분하여 양자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 화폐 및 시장은 자본주의의 본질을 설명하는 범주로서 부르주아경제학에서 흔히 사용되어 왔으며, 이는 시장=자본주의, 계획=사회주의로 이해하는 속류사회주의경제학에서의 용어법까지 포함된다.



자의에 의해 노동시간을 줄일 수 없어, 강제법에 의해 일률적으로 노동조건을 규정할 필요가 생기며,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초기에 이미 노동시간과 노동조건을 규제하는 법률들이 각국에서 제정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의 공장법은 잉여노동에 대한 욕망의 소극적 표현이다. 이 법률은 국가에 의하여 - 그것도 자본가와 지주가 지배하는 국가의 편에서 - 일일노동시간을 강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노동력의 무제한한 착취에 대한 자본의 충동에 고삐를 채운 것이다. 연일 위협적으로 성장하는 노동운동을 논외로 한다면, 공장노동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구아노(비료의 일종)를 영국의 전야에 뿌린 것과 동일한 필연성에 의하여 부과된 것이다(Marx, MEW 23: 253).

무제한의 잉여노동의 수취를 목표로 하는 자본의 운동은 노동과정에 편입되는 노동자가 파괴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진행되며, 개별 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파괴된 노동자를 다른 노동자로 쉽게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손실없이 대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급으로서의 노동자계급을 장기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 사회적으로 평균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통해 무한한 잉여노동에 대한 욕망을 규제해야 할 필연성이 생기는 것이다.

이는 자본의 재생산이 노동력의 재생산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거꾸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순조로운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자본측에서 자유의지에 의해 이와 같은 입법을 추진한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발전이 가장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의 확산이 가장 덜 '혁명적'으로 전개되었던 영국에서조차

노동의 시기, 한계, 휴식을 시계의 소리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이러한 정밀한 제 규정은 결코 의회적 망상의 산물은 아니었다. 그것들은 근대적 생산양식의 자연 법칙으로서 점진적으로 제 관계로부터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자연 법칙의 공식화, 공인 및 국가적 선포는 오랜 기간에 걸친 계급투쟁들의 결과였다(ibid.: 299).

공장법에 대한 분석은 우리에게 노동자계급의 파괴를 막기 위한 사회입법이 한편에서는 자본관계를 재생산 하기 위한 자본가계급 측에서의 필요성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모순적인 자본관계의 재생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계급투쟁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의 발전을 설명해 주는 기본적인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는 자본주의적 모순의 필연적 결과이며, 자본의 모순은 복지에 투영되어 있다(남구현, 1985: 99-103).

자본주의적 착취는 모든 생산품이 그것의 가치대로 교환된다는 의미에서의 가치법칙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그 법칙의 관철을 통해 이루어 진다. 즉 자본가는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대로 구매한 후 자기가 가진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력의 사용가치를 노동력 상품의 구매자로서 소비함으로써, 타인노동의 일부를 사적으로 전유한다. 여기서 노동시간에 대해 또 잉여노동 부분에 대해서 자본가는 노동자가 가진 노동력의 구매자로서, 노동자는 노동력의 판매자로서 서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시간 및 조건 그리고 임금을 둘러싼 계급투쟁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바로 공권력의 독점으로서 국가가 존재해야 할 근거가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자간의 대립은

정상 상태에서는 경제적 관계의 무언의 강제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경제외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은 예외적으로 사용된다. 정치적 폭력은 직접적인 생산관계에서 분리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 역시 본질적으로는 지배적인 계급관계를 재생산하기 위한 정치적 폭력의 독점이지만, 경제적 관계를 매개로 계급관계가 용이하게 재생산되는 것이 가능한 만큼 국가는 계급중립적인 형태로 '전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반자로 기능한다(남구현, 1993: 16-19).

자본주의 국가 역시 다른 모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배계급의 이익을 전체사회의 이익으로 바꾸어 내며, 마치 전체사회를 대변하는 것처럼 현상한다. 실제로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많아지면서 마치 자본주의 국가가 더 이상 정치적 폭력기구가 아닌 경제적 개입 국가, 사회국가, 복지국가인 것처럼 나타난다. 사회복지의 시대 마치 전체 사회를 위한 국가의 사회적 기능인 것처럼, 마치 자본주의적 생산의 모순의 결과가 아닌 것처럼 나타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복지의 계급성은 분명하다. 복지가 가장 보편적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에도 사회구성원이 모두가 그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사실상 복지가 필요 없는 사회의 지배계급은 제외된다. 복지분야의 지출은 일종의 '전체국민에 대한 혜택'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임금과는 달리 위기상황에서는 보다 쉽게 삭감될 수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완충하는 충격흡수장치의 역할을 한다. 바로 여기에 왜 자본의 위기는 항상 복지의 위기로 현상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다.

사회복지는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틀 안에서 발전하는 한,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의 영향을 받는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 가운데에서도 복지선진국과 복지지체국이 있으며, 이렇게 나누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그 나라의 계급적 역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6) 사실 전 사회적으로 볼 때 복지에 지출되는 비용은 그 사회의 총 잉여가치중의 일부분으로서, 자본의 입장에서는 - 그것이 개별자본의 입장에서든 총자본의 입장에서든 - 지출하지 않고 이윤의 형태로, 각자 투자한 양만큼 경향적으로 관철되는 평균 이윤율에 따라 나누어 먹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복지의 혜택을 받는 일반 민중의 입장에서 복지부분에 대한 지출은 투쟁을 통해 얻어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일단 확보된 이후에도 세력간의 역관계에 따라 항시 되돌려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6.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의 복지의 발전이 해당사회의 계급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은 노동자계급의 직접적인 '계급투쟁'과 구체적인 '복지제도의 실시' 사이에 일대일 대응식의 인과론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예를 들어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제도의 실시는 당시의 위협적으로 등장하던 혁명적인 노동자계급의 직접적인 요구사항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당시 후발 자본주의국가로서 부르주아지의 세력이 아직 미약한 상태에서 사회주의적인 노동자운동의 등장은 기존의 질서를 위협하기에 충분했다. 그 결과 일종의 사회주의자를 탄압하는 한편 복지를 제공하여 노동자계급의 충성을 이끌어내는 '복지군주제'의 형태가 나타난 것이며, 이는 후에 부르주아적 질서를 만들어 내는 산파역할을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비스마르크 식의 복지는 당시 독일의 봉건 질서를 대변하는 봉건계급과, 새로이 등장하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계급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강력한 노동운동과 이를 대변하는 좌익정당의 존재가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는데 유용하지만, 독일의 사회입법은 설명을 못해준다고 주장되는 경우에서(김태성/성경룡, 1993: 151) 우리는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투쟁과 복지제도의 발전사이의 단선적인 상관관계를 긍정, 또는 부정하려는 시도를 볼 수 있다.



#### IV. 사회복지: 자본관계의 재생산 또는 지양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는 자본의 모순이 지양된 사회와 관련하여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복지는 자본관계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하므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를 반대해야 하는가, 아니면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산물로서 복지국가는 이미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사회인가? 필요에 따른 분배를 그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의 원칙은 분명히 최대한의 이윤을 그 원칙으로 하는 자본에 위배되며, 마르크스는 일찌기 필요의 원칙이 전체 사회의 기본 원칙이 되는 사회를 자본주의의 모순이 지양된 새로운 사회의 마지막 단계로 쓴 바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관계가 폐지된다면, 즉 자본주의적인 사적소유가 폐지되어 생산수단의(국유화가 아니라) 사회화가 이루지며, 모든 사회구성원은 노동자로서 자신이 노동한 만큼(화폐형태인 임금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량을 계산한 증서를 받아 소비재를 획득한다면, 계급차이(Klassenunterschiede)가 사라져 무계급사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도 아직은 자본주의사회의 지양태로서 의미를 가지며, 자본주의로부터 생겨나서 아직 자기 자신의 기초위에 서지 못하고 구(舊)사회의 흔적을 아직 씻어 내지 못한 단계에서는 형식과 내용을 달리하지만 능력에 따라 일하고 업적에 따라 받는 부르주아적 원칙이 작동한다. "각각의 생산자는 - 공제 이후에 - 그가 사회에 기여한 만큼 돌려 받는다(Marx, MEW 19: 20)." 즉, 사회적 총생산물로부터 1) 사용된 생산수단의 대체비용 2) 생산의 확장을 위한 부분 3) 자연 재해등을 대비한 예비 및 보험기금 등을 일단 공제한 후에 나머지 부분이 소비품(Konsumtionsmittel)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1) 직접적인 생산에 소요되지 않는 일반적인 행정비 2) 학교, 병원등 사회적 필요충족을 위한 부분 3) 노동불능자를 위한 기금 등을 공제한 후에 개별적인 분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Marx, MEW 19: 19). 타인 노동의 사적전유를 통해 자기를 증식하는 자본이 지양된 이후에는, 부르주아적 원칙인 업적주의가 말 그대로 관철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생산적 투자와 행정비, 또 사회적 지출은 사회적 공제의 형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법칙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자본관계가 지양된 사회에서 각자는 자기가 일한 노동시간(사회적 필요노동시간에 의해 측정된) 만큼의 증서(Schein)를 사회적 기금을 공제한 다음 사회로부터 받아, 그만큼의 소비품을 소비한다고 할 때, 동일한 가치끼리 교환된다는 의미에서, 또 오직 이러한 의미에서만 상품교환의 법칙이 관철되는데,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형식적으로만 동일한 가치끼리 교환될 뿐 내용적으로는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직접생산자의 잉여노동을 지불하지 않고 전유함으로써, 자본가는 일하고 싶은만큼 일하고 이윤이 남는만큼 가지는 한편 노동자는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대로 받는데 반해, 생산수단이 사회화된 이 사회에서는 잉여노동의 착취가 사라져 말 그대로 일한만큼 받는다는 점에서 가치법칙은 더욱 순수한 형태로 관철된다고 할 수 있다. 7) 질적으로 서로 다른 노동생산물사이에 동일한 노동량끼리 교환된다는 점에서는

7. "여기서는 [공산주의사회의 초기단계에서는] 상품교환을 규제하는 동일한 원칙이 지배하는데, 이는 상품교환이 동가물간의 교환인 한에 있어서 그러하다. 내용과 형식은 바뀌는데, 왜냐하면 변화된 조건하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동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없는 한편 개인적인 소비재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재를 개별 생산자에게 분배하는 문

상품교환에 있어서와 동일한 원칙이 관철되지만, 상품교환에서는 화폐가 교환을 매개하고 상품의 가치는 가격형태로 나타나며 동가물끼리의 교환은 생산자들의 배후에서 평균적으로만 관철되지만 여기서는 노동량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증서가 교환을 매개하고 동가물 끼리의 교환은 직접적으로 또 모든 개별적 노동생산물 사이에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한편 자본주의적 생산에서의 가치법칙은 이미 지적하였듯이 가치법칙의 적용을 통해 가치법칙이 잉여가치법칙으로 전환되고, 동일한 양의 자본이 동일한 양의 잉여가치를 취하려는 자본운동의 결과 서로 다른 생산부문에 속해 있는 자본들 사이에 평균이윤율이 형성되면서 상품가치(비용가격+잉여가치)는 생산가격(비용가격+평균이윤)으로 바뀌며, 이에 따라 오직 평균적자본(평균적 유기적구성을 가지고 있는 자본)에서만 상품의 가격(여기서는 생산가격)과 상품의 가치가 일치할 수 있을 뿐 오히려 상품의 가격의 가치로부터의 이탈은 항상적이라는 점에서 또 다시 상품생산에서의 가치법칙과 구분된다(Marx, MEW 25: 164- 181).

이 경우 사회구성원 모두가 노동자인 한 계급이 사라진 무계급사회라고 할 수 있으나 능력에 따라 일하고 업적에 따라 받는다는 원칙이 관철된다면 아직 개인적인 재능의 차이나 업적의 차이가 전제되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실제로 더 많이 받고, 더 부자가 되는 것을 피할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직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평등한 권리는 부르주아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품생산에서의 동가물의 교환은 평균적으로만 관철되고, 개별적인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공산주의의 초기 단계에서는] 원칙과 실체가 더 이상 충돌하지 않는다고는 하더라도 여기에서의 동일한 권리는 따라서 [동일한 노동량끼리 교환된다는 점에서] 아직 원칙적으로 볼 때 부르주아적 권리이다...내용적으로 보면 불평등한 권리이다 ([ ]안은 필자가) (Marx, MEW 19: 20-21).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의 발전된 단계에서는, 즉 노동분업 아래 개개인들을 노예적으로 종속시키는 것과 함께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사이의 대립이 사라진 이후에는, 노동이 생활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활에서 첫번째로 필요로 하는 것이 된 이후에는, 개개인의 다방면에서의 발전과 더불어 그들의 생산력이 발전하고 공동의 부의 원천이 넘쳐 흐르게 된 이후에는- 그 때에는 우리가 비로소 부르주아적 권리의 협소한 지평을 뛰어 넘을 수 있을 것이며 사회는 자신의 깃발(旗)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누구에게나 그의 필요에 따라! (Marx, MEW 19: 21)

이와 같은 마르크스의 구상은,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복지의 원칙이 전 사회적인 원칙이 되는 것이 바로 역사의 마지막 단계이며, 이는 머리속의 그림으로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실질적으로) 지양되고 그 후 역사가 보다 더 진전된 이후에야 현실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자본주의적 생산은 최대한의 잉여가치의 생산으로서, 여기서의 노동

제에 있어서는 상품동가물의 교환에서와 동일한 원칙이 지배하는데, 하나의 형태의 동일한 양의 노동이 다른 형태의 동일한 양의 노동과 교환되는 것이 그것이다 ([ ]안은 필자가)(Marx, MEW 19: 20).



은 오로지 잉여가치의 생산의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한에 있어서 생산적이다. 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적 필요의 충족을 위한 복지 지출은 따라서 - 비록 그것이 간접적으로 보다 용이한 노동력의 재생산에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 항상 비생산적인 지출로 간주되며, 복지 혜택을 받을 때 복지 수혜자는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보다는 항상 열등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less eligibility principle)은 어떤 형태로든 관철되어야 한다. 복지로 지출되는 부분도 결국은 직접 생산자가 생산한 잉여가치 부분이 노동자에게 또는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민중에게 되돌려지는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복지 혜택은 항상 국가 또는 자본의 시혜인 것처럼 현상하며 (복지국가, 복지 자본주의), 자본의 축적 위기 상황에는 언제라도 삭감될 위협에 처해있다. 자본관계가 지양된다면, 그리하여 말 그대로 가치 법칙이 관철되고, 실제로 업적에 따라 분배가 가능해 진다면, 이제는 생산적 노동은 잉여가치를 생산하기때문에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다 많은 가치와 전 사회적인 부를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적인 노동이 될 것이다. 이때에도 역시 사회적 총생산으로부터 공제된 사회적 기금에서 복지 지출이 이루어지는 점은 같다고 하더라도, 직접 생산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학교, 병원 등의 사회적 필요충족을 위한 부분과 노동불능자에 대한 지출을 직접 담당하게 되므로, 국가나 자본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종속관계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업적에 따른 분배의 원칙이 남아 있다면 국가와 자본에 대한 종속관계는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생산능력이 열악하다던지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구는 보다 생산적인 인구의 부담으로 남아있게 된다. 자본관계가 지양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 속에 일정정도 생산력이 발전해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일하는 원칙이 가능해 질 때에야 비로소 경제와 복지의 구분조차 사라질 것이며, 기여자와 수혜자사이의 구분도 없어지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복지는 실질적으로 사회의 기본 원칙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의 발전은, 그것이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의 재생산을 위해 자본측에서 필요로 하든지 또는 노동자 계급의 투쟁의 산물이든지 간에, 그것이 사회적 필요의 충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최대한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본의 원칙에 배치되며, 자본주의의 태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미래사회의 맹아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의 복지의 발전은 마치 자본주의적 모순이 지양된 새로운 사회가 이미 도달한 것 같은 환상을 불러 일으켰으며, 소위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어떤 다른 것인 것처럼 흔히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관계가 아직 주도적인 관계로 남아 있는 한,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미 확보된 복지부분은 언제든지 되돌려질 수도 있고 항상 삭감될 위협에 처해 있어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지켜야만한다. 자본주의의 틀 안에 놓여져 있는 한 복지는 자본관계가 재생산되는데 있어 하나의 계기로 작용한다.

## V. 결론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등장이래 하나의 제도적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회복지를 자본주의 사회론 및 자본주의 국가론에 기초하여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복지국가는 자본주의국가가 취할 수 있는 여러 형태중의 하나이며,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적 발전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구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개념적인 고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가 가지는 자본주의적 성격이 명확해 짐으로써, 자본주의적

모순의 지양과 관련하여 복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는 자본주의라는 현실에 나타난 미래사회의 모습이다. 자본관계의 지양전략과 맞물릴 때, 복지는 탈상품화전략, 또는 산업화과정의 적응전략을 넘어선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다시말하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활동을 산업화과정에 나타난 이러저러한 문제를 땀질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상품시장의 비인간성에 반대해서 시장의 원리에 반대하는 것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노동을 전유함으로써 최대한의 이윤추구를 자기목적으로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원칙을 사회적 필요에 분배하는 새로운 사회의 원칙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 위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복지'를 '산업화'나 '상품'이 아니라 '자본'과 관련해 개념화할 때, 우리는 자본관계가 사회의 주도적 관계로 온존해 있는 이상, 왜 복지는 항상 부차적이며, 언제든지 삭감될 수 있는 부분으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복지를 위한 활동은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생산관계의 변화와 맞물릴 때, 비로소 복지는 새로운 사회의 원칙이 될 수 있으며, 그때에는 복지는 항상 삭감될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 하나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실제로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태성/ 성경룡, "복지국가론", 서울:나남, 1993  
 김상균,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_\_\_\_\_, "복지국가 위기이후 선진복지국가의 변화", 미발표초고, 1994  
 남구현, '복지국가의 비판적 해석에 관한 일고찰 - 마르크시스트 국가론을 중심으로', 남구현 편, "자본주의 국가와 계급문제", 서울:한울사, 1985  
 \_\_\_\_\_, '자본주의 사회, 국가 및 계급운동', "이론" 제6호, 1993  
 Gilbert, N., *Capitalism and the Welfare State*, New Haven and London:Yale University Press, 1983  
 Gilbert, N./ Harry, S./ Terrell, P.,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New Jersey:Prentice-Hall, 1993  
 Espnig-Andersen, G.,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Cambridge Polity Press, 1990  
 Fine, B./ Harris, L., *State Expenditure in Advanced Capitalism : a Critique*, in: *New Left Review*, No.98  
 Gough, I.,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 London:The Macmillan Press Ltd., 1979  
 Marx,K, *Kritik des Gothaer Programms*, MEW 19  
 \_\_\_\_\_, *Das Kapital I,II,III*, MEW 23,24,25  
 Krätke, M., *Sozialpolitik im Wohlfahrtsstaat*, in: *Das Argument* Nr.183, 1990  
 Taylor-Gooby, P./ Dale, J., *Social Theory and Social Welfare*, London:Edward Arnold Ltd., 1981  
 Wilensky, H.L./ Lebeaux, C.N.,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New York:The Free Press, 장인협 역, "산업사회와 사회복지",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9



#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흐름과 논리

## I. 문제제기

한 사회의 수준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방법과 지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대부분의 방법과 지표들이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 사회가 해당 구성원들의 행복한 삶(well-being)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흐름과 성격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사회의 본질과 방향을 평가해보는 좋은 계기가 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정책은 그 성격상 경제정책, 노동정책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회복지정책은 그 본질상 전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과 함께 빈곤의 제거, 분배 평등의 달성 등을 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사회에서 사회복지 정책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바로 그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Value)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전개에 논리를 살펴보면서 한국사회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의 위상과 역할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한 상황들을 간략히 검토해 본다.

## II.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 분석의 틀 -

한국에서 국가주도의 복지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일반적인 사회복지정책의 기능과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준다. 그런데 국가복지란 시행의 주체가 국가인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국가가 사회복지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사회복지를 법으로 제도화하고 그 재정을 조세로 충당하며 관리와 행정을 국가가 담당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분류를 따르면 국가복지의 범주에는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의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고자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의 목표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그 하나는 개별적인 국민의 행복(individual well-being)의 보장이고 다른 하나는 집합적인 사회적 이해(collective societal interest)이다. 집합적인 사회적 이익은 또 두 가지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복지정책의 실시로 인한 사회적 통합성의 증대(social integration)의 증대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사회의 경제부분에 대한 기여이다. 그런데, 위의 목적과 기능 중 '인간다운 삶의 영위'라든지 '자아실현의 보장'과 같은 것들은 철학적, 규

범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현실의 복지국가가 전개되어 나온 과정과는 무관한 것이다. 즉, 보편적이고 탈계급적인 복지국가의 이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인 기능과 성격은 한국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 III.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전개와 논리(제 3공화국부터 제 6공화국까지)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전개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면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의 기능과 역할이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전개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전개를 규정해 온 논리들은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기능과 관련된 경제정책과의 관련성의 정도와 그 방향, 정치-사회적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서 권위주의적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 계급갈등의 관리 등이

었다. 한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복지제도가 도입된 것은 정부수립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의 일이다. 사회복지관계법은 5.16군사쿠데타 이후 대량 입법되는 데 이 시기는 한국 자본주의가 본격화 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사회복지입법의 대표적인 예로는 생활보호법(1961), 의료보험법(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4)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대량입법의 배경에는 민주적인 선거가 아니라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의 정당성 확보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복지관계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성을 확보하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제

1 차 경제개발의 시행과 함께 국가의 정책방향에서 경제적 측면이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자원의 사용이 경제개발의 측면에 집중되었고 군사정권의 복지요구 수용도 소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군사정부는 경제적 성장의 달성이 자신들의 정당성 확보의 첩경으로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점은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 재정상의 문제로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못한 점이나 1963년에 의료보험법의 제정과 과정에서 사회보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강제적용의 규정이 삭제됨으로서 제도 자체가 유명 무실화된 점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특성은 1980년 신군부정권의 등장 이후에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도 노인복지법(1981),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생활보호사업법의 개정(1982), 아동복지법(1984) 등의 제정이 이루어져 사회복지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에는 신군부의 정당성확보라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였으나, 80년대 초반의 경제불황이 제도의 내실화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80년대 중반이후에는 주목할만한 점이 보이는 데 이 시기가 광범위한 민주화의 시기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80년대 중반에 국민연금법(1986), 최저임금법(1986), 고용보험법의 조기도입계획 발표 등 사회복지정책이 제도적으로 확충된다. 그러나 이러한 5공정권의 '복지사회의 건설'은 노동운동 혹은 사회운동의 직접적인 산물이 되기 보다는 국가의 선제적인 공세의 일환이었다. 이는 기존의 정치경제적 질서를 유지하는 대가로 약간의 물질적 양보를 하겠다는 정치적 공세의 표현이었다. 즉, 87년 이전의 복지정책은 직접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해서 추진된 것은 아니고 정치적, 사회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되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 전개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기능성 여부를 정책지향의 중심에 둔 결과 정부재정은 성장을 위하여 먼저 배정되고 사회복지에 잔여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정책결정은 절대적으로 복지재정의 만성적인 결핍을 야기하여 복지정책의 수혜범위와 수혜수준의 성장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기능성이라는 것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산업재해, 노동력의 보존, 기술인력의 공급, 복지재원의 산업부분투자 등을 말한다. 이러한 측면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도입이나 1977년 의료보험의 대기업우선 실시, 생활보호사업에서 직업훈련의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정권 이후 복지입법이 대량 등장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이 정치적 안정 및 국민적 지지를 도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볼 때 내용면에서 충실도를 더하기 보다는 가시적인 제도의 양적 확충이라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다. 그 결과 사회복지정책의 범위와 그 질적 수준은 빈곤하게 되는 반면 국민들의 참여를 통한 복지제도의 확충과는 괴리된 형태의 복지제도를 구성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정책형성과정에서의 민주성과 일관성의 견지는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정치, 사회적 안정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분단이데올로기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이다. 분단의 현실속에서 북한체제와의 경쟁은 과중한 군사비의 지출을 강요하였고 이는 상대적인 복지재정의 약화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사회복지 요구와 복지정책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요구 역시 체제의 안보라는 측면에서 통제되어 왔다.

이러한 계요인들이 작용한 결과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특성으로는 낮은 사회복지재정지출, 수혜범위와 수준의 열악성, 복지수혜자의 참여구조와 일관된 전달체계가 부재로 요약 가능하겠다.

#### IV. 김영삼정부의 사회복지정책전망

김영삼정부의 등장으로 인하여 변화된 지형변화가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전망과 전개에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는가를 고찰해 보자.

우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 정부가 그 창출과정상 형식적인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등장한 정권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정권에서 중요시 되었던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은 경감된 측면이 있는 반면 다양한 복지요구의 분출이 용이해졌다는 측면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그간의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을 볼 때 새로운 정권의 초기에 대규모의 복지입법이 정권창출과정상의 정당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정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당성을 크게 확보하고 있는 현정부하에서는 이러한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사회복지확대조치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동수당, 실업보험과 같은 일부 제도를 제외하고는 선진 복지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를 형식적인 면에서 거의 다 갖추고 있다는 면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전망은 더욱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권위주의적 정권의 강압적 통제하에서 억눌려 있던 국민의 복지요구의 가시화라는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의 확대라는 전망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한 정치적 차원에서의 요소를 고려하여 보면 제도들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 수준의 제고와 수혜범위의 확장이라는 측면으로의 이동을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서 "신경제 5개년계획('93-97)" 속에 나타난 언급들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서 국가발전단계에 맞는 사회복지정책 방향의 설정이라는 언급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나, 기존제도의 내실화, 효율적인

징수체계와 보험급여의 연계방안 마련을 통한 사회보험관리의 효율화라는 언명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까지 현실적으로도 사회복지관계법의 대량입법은 보이지 않고 '의료보장개혁위원회'의 활동, '생활보호액수의 소폭인상' 등 제한적인 변화에 그치고 있다.

김영삼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과 관련한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의 확대전망은 불투명하다. 과거와 같은 성장위주정책의 고수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정부재정부담을 압박할 것이며 생산에 기능적인 최소한의 잔여적인 복지정책의 유지라는 기조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영삼정부의 성장위주 경제정책은 과거의 성장위주정책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측면을 주목해야만 할 것이다. 즉, 사회복지를 실질적으로 배제한 상태의 성장정책이 아닌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을 기능적으로 결합'시키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복지를 배제하지는 않되 복지를 경제성장에 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추구는 그동안 분배없는 성정이 야기했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인식의 공유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 성장잠재력의 확충이나 혹은 경제정책 전반에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부문은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보이거나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가족, 혹은 시장기구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직장,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취업여성과 기혼 유희여성인력의 산업화 촉진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영육아 보육시설의 확충, 고용보험의 도입, 농어민연금의 실시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책방향은 각각 산업구조조정, 생산인력의 부족, 우투과이라운드라는 경제상황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여타의 복지부문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늘어나는 복지요구와 같은 파생되는 문제점은 시장메카니즘의 도입이나 민간부분에로의 책임전가로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것은 복지의 책임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메카니즘을 도입하여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상품화를 유도하고 기업과 민간복지단체 등에게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국가재정의 투입을 억제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장기적으로 볼 때 복지이 책임을 국가뿐만 아니라 가족, 기업, 지역사회 등이 부담하는 소위 '복지다원론'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입되고 있는 '개인연금보험제도'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유료 복지사업'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측면과 관련하여 80년대 중반 이후 성장해온 노동운동의 성장, 사회복지 요구투쟁, 각 영역별 부분운동의 성장은 공동화된 사회복지제도의 질적인 전단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변화된 지형속에서 다양하게 분출될 수 있는 복지요구가 일부 또는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분산 혹은 산발적으로 표출될 경우 오히려 희석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국민들의 복지권과 관련된 복지요구가 복지수혜계층의 집단이기주의로 오인, 전파되고 이것이 정부의 산별적이고 잔여적인 복지정책과 맞물릴 경우 전면적인 복지의 개혁과는 괴리된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김영삼정권의 초기에 등장한 한의사-약사들의 충돌 역시 국민의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인 '의료' 문제의 해결과 관관련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이기주의로의 전파와 복지요구운동세력의 미성숙 등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복지이득은 유명무시화되는 사례를 경험하였다.



이상과 같은 새로운 정부의 등장으로 인한 사회복지정책의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김영삼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영향요인

구 분	부정적인 요인	긍정적인 요인
정치적 요인	정치적 정당성의 강화로 인한 확대요인의 약화	문민정권의 등장으로 인한 복지욕구분출이 용이
경제적 요인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국제 경쟁력강화주의	산업구조조정과 경제성장과 복지의 기능적 연계
사회적 요인	복지욕구의 다양, 다변화로 인한 운동역량의 분산	통일논의의 확대와 노동운동, 사회복지분야성장

####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철저하게 경제정책과의 기능성여부와 정치적 도구의 결합 산물이었으며 특정한 국면에 있어서 산발적인 형태로 실시되는 경향을 특징으로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김영삼정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의 논리와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이전에 비하여 획기적이거나 전면적인 사회복지 관련 변화는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자본주의하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은 철저한 성장 대 분배의 이분법적 논리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사회복지의 확대를 위한 전략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는 현재 한국사회의 산업구조 조정과 대외 조건의 변화를 적절히 이용하여 한국경제가 요구하는 것들을 수용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기존의 배제되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사회복지 부문의 참여 가능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두번째는 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으로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치역량의 강화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성격과 본질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의 정치적 결정과정과 이의 제도화이며 이러한 제도화의 기초는 정치역량의 조직화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역량의 조직화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한국사회 중산층과의 연계이다. 이제까지 사회복지 요구 투쟁은 주로 사회복지 수혜자 집단이나 관련 조직 사이의 수평적인 연대에 치우쳐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성격 상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중산층과의 연대 가능성 및 타협, 포섭, 굴복 등의 관계 설정에 관한 전략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 한국자본주의와 장애인 문제

### 1. 서론

모든 사회문제는 당시의 사회형태와의 관련속에서 파악할 때만이 문제의 본질, 즉 문제의 뿌리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장애인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형의 사회가 아닌 자본주의 사회로서의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바로 그러한 자본주의 사회와의 연결에서 나오는 문제인식이 장애인 문제의 올바른 방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은 구체적 한국사회에서의 장애인 문제를 파악하는 전단계로 한국 사회성격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자본주의 일반에서의 장애인 문제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의 구성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생활실태를 제시하여 그 빈곤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러한 빈곤의 원인이 자본주의에서의 노동력의 상품화와 노동시장에서의 수급조절에 있음을 제시할 것이다. 이 글은 장애인이 사회(구체적으로는 노동관계)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인식론적 차별에 근거한 것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의 이윤추구와 그 맥을 같이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 2. 본론

#### 1)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생활실태와 취업실태

<표 1>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비교

(단위 : 누적 비율 %)

	'90 전체 장애가구	'90 전체 비장애가구	'90 서울 장애가구	'90 서울 일반가구	'94서울 생보장애가구
10만원 미만			9.0	1.4	13.9
10-20만원미만	20.9	4.9	15.8	3.1	33.6
20-30만원	33.1	10.0	26.9	6.9	51.4
30-40만원	46.7	18.1	39.5	14.1	75.0
40-50만원	57.2	28.2	48.5	22.6	88.5
50-60만원	68.9	43.1	62.1	36.0	91.9
60-70만원	76.9	55.7	69.9	47.3	98.2
70-100만원	88.5	76.1	83.2	68.6	



100-150만원	96.0	91.7	93.5	87.4
150-200만원	100.0	100.9	96.8	94.0
200-300만원			98.6	97.5
300이상			99.4	99.2

주: '90서울장애가구의 경우 장애인 가구주의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자료: 보건사회연구원(1992), 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미발표)

93년 1월 현재 보사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국민 44,056천명 중 2,001천명(4.5%)이 생보자 대상인원이고 그 중 장애인 생보자는 약 5%인 100,000명 정도이다. 이는 보사부 발표대로 장애인구를 1백만으로 하면 장애인구의 약 10%가 생보자라는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장애인 생보자의 수에 근거해서만이 아니라 장애가구의 수입 평균을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듯이 전체가구의 수입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장애와 빈곤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직접 빈곤문제와 연결되는 장애당사자의 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나타난다.

<표 2> 장애인구와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천명)

	15세이상(생산가능연령)인구					
	총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취업자	실업자(울)	소계	활동인구	계
'90 전체인구1)	42,869 (100%)	18,036	451(2.4%)	18,487 (43.1%)	12,314 (28.7%)	30,801 (71.8%)
'90 장애인구2)	956 (100%)	293	142(32.7%)	435 (45.6%)	444 (46.5%)	880 (92.1%)

자료: 1. 통계청(1990).  
 2. 노동부(199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의 자료 재구성).

우리나라 장애인의 취업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들의 실업률(32.7%)은 전체인구의 실업률(2.4%)에 비해 상당히 높다. 취업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므로, 이 실업률을 통해 능력이나 장애의 정도와 상관없이 장애를 이유로 취업이 되지 않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중도의 장애뿐 아니라 경도장애의 상당수가 취업하고 있지 못한 것이 이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1)

1)전체 장애인중 약 20%에 이르는 이들이 장애가 심하여 취업할 수 없다고 스스로 정의

둘째, 취업이 된 경우에는 낮은 지위와 저임금 속에서 노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장애인을 산업별로 보면 점차로 쇠퇴하고 있는 1차산업의 종사자가 전체의 33.1%에 해당된다. 전체인구의 경우에는 18%만이 종사하며 그나마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고 하겠다. 직업에서는 전문직과 사무직에는 거의 종사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낮은 교육수준 등의 노동력 재생산과정에서의 차별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100인 이상의 비교적 안정되고 임금이 높은 사업장에 취업해 있는 경우가 장애인 전체노동자 중 9.0%에 불과하다. 전체인구의 노동자중에서는 17%가 종사한다. 서울시(90년)의 자료에 따르면 취업장애인중 혼자 일하는 자영(영세자영) 35.9%를 별도로 하고 10명이하의 사업장이 39.7%, 11명에서 99명까지의 사업장이 15.3%, 100명이상 사업장은 4.2%에 불과했다. 이렇게 산업, 직업,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본 결과는 장애인들의 낮은 취업위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2) 자본주의와 장애인

### 가. 노동력의 상품화와 노동시장

이상에서 살펴본 장애인들의 빈곤, 그 빈곤을 야기하는 실업과 낮은 취업위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장애인은 처음부터 사회유형을 불문하고 노동의 영역과는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노동을 통하여 살아 온 것인가. 아니다. 장애인이 노동을 하는 데 있어 전 자본주의(pre-capitalism) 사회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그렇다고 장애인의 삶이 전 자본주의에서 더 풍요로왔다거나 행복했다는 것은 아니다). 생산과 소비 또는 생산과 재생산이 가정과 특별히 분리되지 않는 동일영역에서 이루어졌고 장애인의 노동도 가정--소규모 집단노동의 형태인 가내노동 포함-- 내에서 의미있는 부분으로 역할을 했다. 즉 자본주의 이전의 시대에서까지 장애인들은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기는 했겠지만 가족노동 안에 통합되어 하나의 경제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공동으로 노동을 하고 공동으로 수확을 하는 상황에서 신체의 손상이나 어느 한 부분의 기능제약은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본주의 생산관계에서의 장애인은 전 자본주의 사회에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노동은 산업화와 함께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대규모 사회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축에 의한 고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장애인은 생산부문에서 구조적으로 분리된다.

이러한 분리는 노동력의 상품화와 노동시장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Marx(1989: 217)는 자본주의 시대를 특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노동력이 노동자 자신에게는 그가 지닌 상품의 형태를 취하고 따라서 그의 노동이 임노동이라는 형태를 취한다는 사실이라고 논한다.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은 노동력 자체의 소유자, 곧 그 자신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서 팔려고 내놓아서 판매되는 경우에만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력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어떠한 여건이 조성되는가에 따라 이들의 노동가능성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인구센서스 조사에서 '불구'를 이유로 노동할 수 없다는 이가 169,000명이었다. 그러나 이 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사회환경의 변화가 장애를 예방,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측면이다.



을 상품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다른 생산수단(원료, 노동도구 등)을 갖지 않았을 경우, 그것이 유일한 생존수단이 됨을 의미한다. 때문에 노동력의 소유자는 자기 노동이 대상화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고 대신 그의 살아 있는 육체 안에서만 존재하는 자기 노동력 자체를 상품으로 팔기 위해 내놓아야 한다. 여기서 노동시장은 노동력의 수용자와 공급자를 연결시킨다. 2)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화의 생산과 수입의 분배가 본질적으로 노동시장과 노동계약제도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모든 개인이 노동시장이나 계약에 기초한 노동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모든 이가 노동시장의 공급자 측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이들을 비활동적 범주의 사람들(I범주), 실업의 상태에서 노동시장에 들어가자 하는 이들(II범주), 노동시장 안에 있는 이들(III범주), 노동시장 이외의 부분에서 노동하고 있는 이들(IV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Offe 1985) 이 분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시장과의 관계를 통해 개인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II, III 범주는 노동시장에 직, 간접으로 속해있고 I, IV범주는 그들의 노동력이 노동시장의 기제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III의 범주만이 아니라 I II IV범주 모두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Marx의 상대적 과잉인구론과 Doeringer와 Piore의 이중시장론을 통해 자본이 최대의 이윤을 어떻게 추구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 나. 상대적 과잉인구와 노동시장의 분절

앞의 논의에서 노동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 범주 I, 실업의 상태에서 노동시장에 들어가자 하는 범주 II, 그리고 제한된 의미로의 범주 IV의 사람들은 Marx의 상대적 과잉인구<sup>3)</sup>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상대적 과잉인구는 자본주의적 축적의 필연적 산물이지만 이는 반대로 자본주의적 축적의 근간이 된다. 자본은 상대적 과잉인구를 자기에게 종속시키고 자유로이 이용한다. 즉 상대적 과잉인구는 노동력의 공급원인 동시에 취업노동자보다

2)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시장은 두가지 문제의 제도적 해결책이다. 첫째, 생산체계에 노동력을 공급한다. 둘째, 노동력의 용기인 노동자에 생존을 위한 화폐적, 사회적 수단을 제공한다.

3) 상대적 과잉 인구는 세가지 존재 형태를 갖는다. 유동적 과잉 인구, 잠재적 과잉 인구 및 정체적 과잉 인구가 그것이다. 유동적 과잉인구는 일반적으로 '근대 산업의 중심에서 때로는 방출되고 때로는 보다 대량으로 흡인되면서도 생산 규모에 대한 비율에서는 끊임없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과잉인구이다. 잠재적 형태의 과잉인구는 고전적 의미로는 농업부문에서의 자본주의의 발전이 창출해 낸 상대적 과잉인구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정체적 과잉인구 '현역 노동자 군의 일부를 이루면서 그 취업이 극히 불규칙한' 하층 중소기업의 노동자, 임시로 일하고 있는 가내노동자, 하청 고리로 연결된 부업자 등으로 구성되며,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는 노동력의 마르지 않는 저수지를 자본에게 제공하는 과잉 인구의 최저변에는 부랑자, 범죄자 등의 롬펜프롤레타리아, 고아, 빈민아, 그 밖의 노령화, 불구화 등으로 인한 노동 무능력자로 구성되는 빈민층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은 위의 세 형태로부터 물락해 내려간 최저변의 침전층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6:27-30)

나쁜 조건으로도 고용되려고 하는 경향을 갖기 때문에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거나 그 개선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는 범주 I의 경우 상대적 과잉인구의 가장 밑바닥에 침전되어 있는 피구홀빈민, 특히 노동불능자(산업예비군의 죽은 층)와 유사하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물론 노동 무능력자의 경우라도 직접적으로 자본의 착취 대상이 되지 않고 현역 노동자의 경쟁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그 계층적 재생산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끌어내리고 노동자간의 경쟁을 격화시켜서 임금 수준과 착취율의 사회적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산업 예비군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6:30). 그러나 범주 I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다. 오히려 상대적 과잉인구 중 유동적 형태와 유사하다. 그들은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실업상태로 머무르지만 수요가 존재했을 때 가장 열악한 지위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자본주의 안에서 살고 있는 이들을 위의 네 범주로 나누는 것, 그리고 그들의 상대적 과잉인구의 구성은 곧 독점단계의 노동시장의 분단화라는 현상으로 이어져 노동력에 대한 차별을 설명한다. 자본주의의 노동시장은 더 이상 인적 자본론에 근거한 단일 노동시장이 아니다. 이 접근은 몇 가지 가정들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임금, 부가급부, 고용안정성 등의 노동조건은 부문에 따라 다르다. 분절된 노동시장 내에서의 노동자의 위치는 인적 자본을 통제할 후에도 승진과 임금의 불평등을 의미있게 설명한다.

둘째,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이 부문에 따라 다르다. 즉, 노동자의 인적 자본은 그들이 속해있는 부문에 따라 달리 보상되며 노동에 필요한 노동자의 인적 특성 또한 부문에 따라 다르다. 셋째, 특정 사회집단--예를 들어 인종, 민족, 성--은 역사적으로 특정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집단 간의 소득불평등의 상당한 정도는 분절된 노동시장에서의 이들의 위치에서 비롯된다. 마지막으로 부문간의 노동자 이동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다시 말하여 분절된 노동시장 내에서의 노동자의 위치는 거의 불변한다(김영화, 1990:292).

노동시장의 분절론은 시장의 분절이 곧 차별의 고착화이며, 시장의 진입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혀준다. 이것은 인적자본론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동일 노동에 대한 차별과 노동능력에서 나타나는 차이 이상의 차별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논의가 된다.

#### 다. 문제집단의 형성

이제 상대적 과잉인구론과 노동시장분절론의 근원을 형성하는 위의 각 범주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보자. 이는 노동력 상품의 독특성에 근거한다. 단순한 상품교환과정에서는 각 상품소유자가 서로 대등한 인격으로 만나 서로의 상품을 교환하지만, 노동력상품의 교환 즉 자본, 노동의 교환과정은 이와 다르다.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고용계약에서 노동자는 결코 대등한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노동력을 매일 판매하지 않고는 생활수단을 획득할 수 없으며, 더우기 그와 그의 다수의 동료들은 소수의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자본, 노동관계의 성격때문에 노동력상품이 실현되는 노동시장은 기본적으로 구매자 시장이 된다. 즉 노동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고 자본인 것이다(일차적 권력차이).

여기서 개별 노동력 공급자는 전략적 장애에 직면하여 동료 공급자보다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 차이를 최대화하고자 한다. 이는 대체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략이다.



만일 성공한다면 그들은 다른 공급자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전략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는 노동공급의 가격(임금)을 떨어뜨리거나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 수요자 측은 공급자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이 경쟁에서 실패하는 '문제집단'이 생기게 된다(이차적 권력차이).

이러한 일차적, 이차적 권력의 가장 하위에 있는 집단이 노동시장에서의 '문제집단'이다(Off, 1985). 그들은 평균보다 더 실업이 잦고, 노동시간상으로도 실업시간이 많고, 고용관계로 들어가기 어려우며, 들어간다고 해도 낮은 수입과 제한적 자율성, 위험한 작업 등의 특성들을 갖는 노동환경, 즉 2차노동시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어떤 공급자가 문제집단에 남게되는가. 자본은 노동력 자체의 자연적 속성(연령, 성, 인종 등)이든, 노동력의 매매를 둘러싼 제조건(지역, 학력, 신분, 근속년수, 기업의 독점이윤, 생산물의 차별에 의한 특별이윤)이든 쌍방에 존재하는 구별 및 차이를 최대로 활용한다. 일본에서의 연령, 영국에서의 성별, 미국에서의 인종 등이 차별화의 특성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화의 조건중에서도 '문제집단'의 특성은 획득된 것(교육, 수입, 거주지)이 아닌 귀속적인 사회적 특성(연령, 성, 신체적 조건physical condition, 민족)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어느정도 고정되어 있는 특질이라는 것, 개인적인 힘으로 변경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에서 의미를 갖는다.

산업혁명 직후 이전에는 노동시장에 존재하지 않던 그룹이 노동조건이 바뀐(단순노동분야의 확대)으로써 이차적으로 노동시장에 투입되고, 비숙련, 저임금의 위치에 처한다는 측면과, 남아있는 '공학적 기능의 차이' 이상의 차별화의 측면을 통해 특정 귀속적 특성을 가진 인구가 차별된 것을 여성노동력의 흡수를 통해 볼 수 있다. 이 논의에서도 차별은 생산과정에서 사용가치나 노동력의 질에서 나타나는 차이와는 분명 다른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그룹'의 발생은 노동시장 내에서의 개별 노동자의 물리적 '열등성'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고, 그들이 갖는 기회가 정치적, 규범적 요인에 의해 악화되었다는 사실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규범적 요인이란 편견, '통계적 차별'에서부터 연금대상자라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장애인, 여성, 소년, 노인, 외국인 등, 노동시장에서 전략적으로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 이들 그룹이 모두 문화적, 정치적 수준에서 노동시장의 밖에서의 삶이 형태를 '당연히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들 집단에 대해 어떤 식의 차별이 나타나고,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 라. 차별의 유형

차별은 자본에 의한 노동력의 차별을 의미한다. 그러한 차별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즉 노동시장에 들어오기 전 노동력 재생산과정에서의 차별, 고용차별, 그리고 임금차별(노동력 및 노동평가의 차별)이 그것이다. 이 세가지 형태의 차별은 상호연관되어 행해진다. 즉 노동력재생산과정에서의 차별은 고용차별로, 고용차별은 임금차별로 연결되며 이것은 다시 노동력 재생산과정에서의 차별을 가져온다(김형기, 1981:38-43).

먼저, 노동력 재생산과정에서의 차별은 '세대적' 재생산과정에서의 차별과 '현실적' 재

생산과정에서의 차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Brown(1977)은 차별의 형태를 '노동시장에 들어오기 전의 차별'과 '노동시장내부의 차별'로 구분하는데, 노동시장에 들어오기 전의 차별이 세대적 재생산과정에서의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피차별자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가장 적합한 고용상황에서 그것을 행사할 기회를 부정하는 것이다. 교육의 차별적 제공, 거주지의 격리 등으로 아동의 잠재능력개발을 억제함으로써 양육과정에서 차별을 가져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한편 현실적 재생산과정에서의 차별은 노동력의 재생산비인 임금이 노동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상태하에서 매일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액수에 미달하게 될 때, 노동력의 마모를 가져와서 발생하는 누적적인 노동력의 가치 저하를 의미한다.

다음, 고용상의 차별은 개별자본에 의해 노동자가 채용되고 계속 고용될 경우의 차별이다. 동일 노동능력을 가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바로 이러한 유형의 차별이 된다. 여기에는 여성노동력에 대한 차별,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 등이 포함되며, 고용기회의 제한뿐 아니라 고용형태상의 차별(임시직), 승진의 차별, 해고상의 차별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고용상의 차별은 곧 임금차별로 이어진다. 특정 노동력의 가치의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특정노동력이 다른 노동력과 동일한 가치생산물을 자본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정노동력은 종종 낮게 평가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세 측면 모두에서 보여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에서 장애발생률이 높다거나, 장애아동의 교육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노동력 재생산 과정에서의 차별은 매우 심각하다.

#### 마. 차별의 정당화 근원

차별의 근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Johnson(1986:242-261)). 첫째는 편견이고 둘째는 통계적 차별--불완전한 정보--, 셋째는 독점적 차별이다. 세 가지의 차별의 근원에 대한 설명은 차별이 장애인 개인의 특성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성의 문제로 귀결되어 고착되는 것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먼저 편견은 개인이 단지 그 집단에 속한다는, 그래서 그 집단에 귀속적인 객관적 특성을 갖는다고 예상되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에 대한 혐오적, 또는 악의적 태도를 의미한다. 우리는 흔히 장애인이 고용주가 갖는 편견때문에 취업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실제적으로 있으며 고용을 방해한다. 문화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장애가 가시적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강하다는 그리고 여타의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보다도 강하다는 연구들이 있다.

둘째, 고용의 측면에서 생산성에 대한 장애효과를 예측하는 것에서의 근본적 불확실성이 "통계적 차별"을 만들어 낸다. 통계적 차별의 이론에서는 고용주가 소수자(minority) 노동자가 평균적으로 다수자 노동자보다 덜 생산적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소수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다(Arrow, 1973; Phelps 1972).

장애인은 이 통계적 차별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집단이다. 편견이 없는 고용주라고 해도 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손해를 보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표 3> 참조). 이 차별은 장애인에 대한 정보의 부족에서 오는 차별이므로 장애인의 생산성에 대한 정보를 확충하면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표 3〉 고용주의 장애인 미고용 사유

구분	빈도	비율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및 관리가 부담되어	64	15.0
직장내의 인간관계 문제가 부담스러워서	21	4.9
원하는 기능인력이 없어서	131	30.6
생산성적이 떨어져서	32	7.5
본 기업의 업무는 대인서비스여서 적합하지 않으므로	76	17.8
기타	104	24.3
계	428	100.0

자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992:26).

그러나 편견과 통계적 차별이 독점적 차별과 연결되면 차별의 해소는 어려워진다. 독점적 차별은 노동자의 노동력이동에 대한 장벽에 의해 발생하는 차별을 의미한다. 이것은 차별의 근본적 원인이라기 보다는 차별의 결과가 다시 차별의 근원에 영향을 주는 양상을 띠는 것이다. 장애인노동자는 고용주의 편견과 통계적 차별, 즉 이로인한 직업선택 범위의 제한성, 물리적 이동에 대한 장벽, 정보에서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해 고용될 수 있는 영역이 한정된다. 한정된 영역의 고용주들은 장애인노동자에 대해 독점권을 갖게 된다. 다른 곳으로 직업을 이동할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독점적 차별은 자본측에 경제적 효율성을 가져온다.

이러한 독점적 차별로 인해 편견과 통계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편견에 기인한 경제차별이론을 발달시킨 Becker(1957)는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편견은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고용주가 자신의 편견을 만족시키기위해 이윤을 무시하며 많은 임금을 주어 비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편견이 없는 고용주는 적은 임금으로 소수자를 고용하게 되므로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대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성향으로 인해 점차 편견에 의한 차별고용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편견은 사라지지 않았다. 편견을 제거하여 얻는 경제성보다는 편견을 통해 이루어지는 독점적차별의 경제성, 상대적 과잉인구의 형성으로써 얻게되는 이득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3. 맺으며...

[그림 1] 연구의 모형

손상장애  
기능장애

노동시장  
(차별화기제)

고용계약  
(사회적장애)

국가정책

이 글은 자본주의와 장애인의 삶의 제약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가설을 입증해보기 위한 것이었다. 분명 노동력이라는 상품으로 최대 이윤을 올리고자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는 노동시장의 차별화 기제를 통해 장애인의 삶 전반을 질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림 1]은 장애가 능력장애로 이해되어 고용계약으로 연결되는 기존의 설명이 아닌, 손상과 기능장애를 가진 장애인과 사회적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장애로 고용 계약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의 변수로는 자본주의 노동시장과 국가의 정책을 설정하였다. 노동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고용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고용주와 다른 공급자에게 영향을 주는 일인 한편, 영향을 받는 일이다. 장애인과 노동시장과의 상호적 관계에서 고용계약은 발생한다.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자질에 부합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계약이 발생하는 측면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화기제를 사용하고 있어 고용계약이 발생한다는 측면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환경의 다른 한 변수인 국가정책은 장애인 고용계약의 문제에 있어 자본주의 노동시장과 장애인 모두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고용주에 대하여 포함의 정책을 요구하느냐, 배제의 정책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계약은 그 정도와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도 국가정책은 영향을 미친다. 즉 장애인 연금이나 생활지원의 정도에 따라 취업에 대한 장애인의 필요가 달라지며, 따라서 고용계약의 정도가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가정책은 장애인과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변수이기도 하다.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실행과정 모두에서 국가는 압력집단의 영향을 받는다.

이 모형에서는 손상장애와 기능장애를 가진 이들이 사회적 환경으로 자본주의 노동시장과 국가정책과의 상호작용 하에서 고용계약이라는 사회적 장애를 경험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고정변수인 손상장애와 기능장애는 자본주의 노동시장과 국가정책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 사회적 장애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자본의 차별화 전략은 장애인에 대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 대해 존재하는 것이다.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것은 전체 노동자를 제약하는 효율적인 수단 이 된다. 사회복지로 대변되는 현재의 국가 정책이 이러한 차별화를 보완해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미약하다. 그것은 차별화 보완의 정책이 곧 자본주의 노동시장을 위협하는 정책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만으로는 충분한 고용효과를 얻을 수 없다. 이는 장애인 고용의 트로이카 시스템이 현실에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고용계약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차별화기제에 대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 한국의 장애인들, 무엇을 할 것인가!

## 1. 현 시점 장애인운동의 현황 진단.

### 1.1 한국사회계급구조에서의 장애인의 위치

현재까지 한국의 정치, 사회적 민주화의 있어서 계급분석의 새로운 구성 과정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나 여타의 계급계층과의 관계에 대한 실례나 사회과학 문헌분석 자료나 구체적인 학문적, 기술적, 체계적 연구자료의 불충분으로 명확한 규정을 내리기가 힘든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에대한 이유는 여러가지 면에서 찾아볼수 있겠다.

첫째 '장애인'이라는 용어의 사회적 차별인식 모호성

둘째 한국사회 계급구성체에서 장애인 위치 부여성을 배제했다.

셋째 장애인단체의 주체적 활동 결여

장애인 대중이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 규정할 때, 장애인 계급은 기본적으로 신체(혹은 정신적) 일부의 기능상실이라는 측면에 의해 구성되며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가 신체적 장애 및 의식적 장애를 포함한 개인적 장애와 그를 둘러싼 환경(가족, 사회, 문화 환경)적 장애의 수준에 의해 일차적으로 결정된다고 볼수있고 이로 인해 그들의 지위를 일반화하기란 매우 힘든 작업이다.

-> 한국사회구성체 구조속에서 장애인의 대한 이해도 결여

-> 장애인 계층에 대한 분명한 위치부여의 노력과 한국사회구조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연구작업 필요

### 1.2 장애인 운동의 역사적 의의

한국사회에서 '장애인 운동'이란 자본주의 사회의 첨예한 계급대립 속에서 정치적 사회적 발전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장애인 대중이 사회변화 요구를 바탕으로 사회, 경제적 활동의 향상화와 인권중심의 운동 영역이다.

1988년 4월 16일 명동성당에서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이하 전지대련)와 서울지역 청년장애인들이 주축이 되어 최초의 진보적인 성격의 대규모의 집회가 열렸으며 장애인 올림픽 거부투쟁을 거점으로 사상적, 이론적으로 장애인 운동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해 10월 9일 군사정권의 맞서 '기만적인 장애인올림픽 폭로 및 장애인 인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는데 여기서는 '기만적인 장애인올림픽 행정당국 각성하라. 장애인고용촉진법 즉각 개정하라.,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지원하라'등의 구호로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이하 전지대련), 전국특수교육과 대학생연합회(이하 전특련), 서울경인지역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학과 대학생협의회(이하 사복협)등이 장애인들과 연합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

1988년의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에게는 주체적 의식의 전기를 마련하였고, 이후의 심신장애 자복지법 개정 및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투쟁을 거치면서 사회 변혁운동의 부문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초보적이거나 장애인운동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왔던 전지대련의 실질적 침체와 가장 진보적 활동주체였던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이하 장청련) 대중력 상실에 따른 장애인한 가족협회(이하 장한협)와의 통합은 단순한 현실 상황의 환경적 변화의 차원을 넘어 장애인운동의 전망에 대한 중심쟁점을 상실하게 하였고 체제흡수적 성향의 관련 장애인 단체간의 이념, 노선, 전술 구분을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활동 내용상의 구분조차 불분명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존 운동단체들의 돌파구 노력이 차츰 보이고 있으며, 운동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지는 양상은 대중지향적인 성격을 가진 것들로 보다 구체화된 형태의 들을 관심의 영역으로 두고 있다. 나아가 정치적 수단의 대중화, 조직구성의 과학화, 복지운동의 대극화의 체계적 발전화는 전체 대중과장애대중의 실질적인 삶을 국가복지, 사회복지, 기업복지 측면에서 매우 향상시킬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장애인운동이 사회변혁운동의 부문운동으로 자리매김 평가

-> 운동의 침체국면을 극복, 프로그램의 다각화 방안

-> 운동의 돌파구 노력 움직임

## 2. 한국자본주의에서의 신사회운동과 신정치환경 변화의 전망.

### 2.1 한국자본주의의 성격

한국의 독점자본은 미국과 일본의 독점자본에 종속된 신식민지적 특수성(월러스턴 Wallerstein의 세계체제론에 따르면 세계자본주의 체제를 핵심부국가와 주변부국가로 구분하고 특히 한국은 미국의 중간자본기지화에 토착화의 성공함으로써 주변부 자본주의국가에 속한다라고 설정하고 있음.)과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자본축적법칙의 보편성이 변증법적으로 통일된 신식민지국가 독점자본주의 (이하 신식국독자)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회성격의 규정은 종속과 독점의 본질성격과 범주적 관계를 두고 논란이 있어 왔으나 현단계에서 한국사회의 계급적 성격과 본질적 모순을 비교적 우수하게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 한국사회 실정에 부합할수 있는 사회민주주의적 국가 자본주의로 발전형태론을 기대할 수 있을것이다.

현재 진보적 정치, 경제학계에서는 한국자본주의의 사회성격이 '중진적 자본주의와 모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후진적 민주주의의 기본적 특질'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신식국독자론이나 식민지반봉건사회론과는 본질적인 차이를 지니는 사회성격분석임에 틀림이 없다.

새로운 논의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한국경제가 종속적 국가자본주의가 아닌 하나의 독자적인 자본주의 국민경제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고 이것은 이전의 독점강화, 종속



심화의 테제에서 종속성의 문제를 다르게 본다는 점이다. 종속성이라 함은 자본과 기술의 종속을 들수 있을것이다.

## 2.2 한국자본주의의 변화와 시민사회 내부의 신사회운동

1990년대 초반에 한국자본주의 계급분화현상은 서구자본주의 후기에 보이는 분화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임노동자가 단순노동계급과 지식노동자로 빠르게 분화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계급분화의 추세는 한국자본주의가 세계자본주의가 축적한 세계적 수준의 생산력 구조를 이식한 것에 기인하며, 한국자본주의가 좌초하지 않은 한 이러한 경향은 확대, 심화될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노동자계급의 역할은 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화 운동의 경우 그들의 역사속에서 완전한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했지만 전문노동자 집단의 신 헤게모니운동 출현이 예상된다. 그러나 전체노동자계급의 경제적 위치만을 이유로 선협적인 헤게모니를 주장을 해서는 안되며 유해하다는 것이다. 선협적인 헤게모니 주장보다는 광범위한 민주적 연대를 형성하는 신사회운동군 또는 시민운동으로 변화, 발전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런 판도변화의 현시점에서 시민사회론은 그람시(Antonio Gramsci, 이탈리아공산당 중앙위원, 후기 맑스주의자, 시민사회논쟁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 유년시절에 사고로 척추장애인이 되어 평생을 병고의 시달렸음)로 인해 그 중요성이 제기되는데 그의 시민사회는 국가 또는 정치사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사적인 것으로 지칭되는 유기체의 총화'라고 정의할수 있을 것이다.

선진자본주의사회에서 사적인 영역 또는 비정치적 영역의 사회조직이나 사회계급의 다양성이 증대되는 현실에 주목하고 그러한 영역의 중요성을 역설하기위한 개념이었다. 물론 맑스에게 있어서도 국가와 시민사회 분리개념이 존재하지만 맑스는 시민사회를 참여한 계급관계로 귀착시킨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드러난다. 그람시와 같은 네오맑스시트들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축에서 전개되는 투쟁과 생산관계의 축에서 발생하는 계급투쟁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비계급적 사회집단과 계급적 집단과의 상호관계를 강조한다.

한편 이러한 논의가 포스트맑시즘으로 이동하면서 경제주의적 계급론의 불완전성이 아닌 불필요성으로 제시된다. 즉 절대적 자율성의 기초한 다원주의적 총아로 사회를 바라본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다소 포스트맑스주의까지 언급한 이유는 현시기에 있어 참여한 계급투쟁의 골간이 되고 있다는 중요성을 상기함과 동시에, 현재의 시민사회론이 구체적 현실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구자본주의의 현실에서 잉태된 성격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다양한 형태로 변화 발전된 국내 사회 정치상황과 운동의 양상은 복잡다기하게 전개되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사회에서 성장하기 시작한 시민운동(시민운동이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운동이다.

서구적인의미에서 시민이란 중세시대에서 자본주의시대로의 변화과정에서 변혁의 주체로서 등장한 계급을 의미하며 주로 상공업자들로 부워부르조아로 표현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사회의 모순이 표출되는 양태와 현상에 따른 구체적인 생활상의 요구나 제반권리의 확보를 산업노동자층과 신중간층을 중심으로 이슈를 제기하는 운동이다.)은 단지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운동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모순에서 파생되는 사회문제들을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운동의 영역이다. 여성운동, 장애인 운동, 사회복지운동, 환경운동 등의 시

민운동은 기존의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중 사회문제의 심각성과 변화하는 현실의 흐름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한국자본주의의 신산업 구도의 재편성과 신사회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장애인운동과 사회복지운동에 있어서 다소 생소한 느낌을 주나 점진적으로 그 움직임은 민중의 복지를 외면하는 국가복지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으며 문제의 공유의식은 전체 한국사회 내부로 확산, 흡수되고 있고 각계각층의 광범위한신사회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에 이슈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정치개편 질서를 예고하고 있다.

-> 민주화운동, 네오맑시즘, 포스트맑시즘 수입

신 시민사회운동론 제기(1987년)

-> 사회주의권 개방결정, 시민사회 내부 신사회운동군 의 출현, 전문노동자집단의 신 헤게모니 부상(1989년)

-> 진보대연합구축 시도, 새 정치제도 수립(1993년)

-> 한국적 실정의 맞는 사회민주주의 방향모색(1994년)

## 2.3 한국 사회의 신정치 발전의 대한 전망

개혁에는 진보적 개혁이 존재하고 또는, 보수적 개혁이 존재한다. 김영삼정권의 개혁은 일시적 허구의 환상논리에 불과한 보수적 개혁의 본보기이다.

그래도 문민정권의 보수적 개혁의 성과물은 적지 않았다. 설상 개혁논리의 원래 해석이 새로운국제질서에 발 맞춘 것이긴 해도 말이다. 특히 정치자금과 선거의 관련된 일련의 법제도적 장치들, 아직 모순점이 들어 났지만 경제 민주화의 단표인 금융실명제, 군부내 사조직 척결등은 비록 정도가 한계점을 드러냈지만 한국 사회의 장기적 발전에 측면에서 지적하면 가치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새로운 정치적 환경풍토와 기반제공의 열쇠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과제는 반민주주의 악법인 '국가보안법'과 노동자의 균등한 기회를 무시한 '노동관계법' 등 과거 군부독재정권 시절의 반민주 악법의 개, 철폐작업의 진행 여부로 어느정도의 진척율이 관망되고 있다.

이 같은 새 정치 환경의 분위기를 직시하며, 95지방자치제 선거, 96년 대선과 총선거에 대비해 과거의 제도권의 활동제한 세력이었던 재야운동권과진보적 제도정치권의 리더십들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신흥정치세력들의 최근의 활동내역을 보면 1994년 4월 13일 과거 재야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6인방 김근태(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이창복(전국연합), 장기표, 이부영(민주당), 제정구(민주당), 임채정(민주당)등이 모여 '새시대 연대'라는 재야운동과 정당운동의 중간형태라고 자인하는 양태를 출범시켰다. 이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다가올 선거에 대비한 정당조직의 초기사업이라 할수 있고, 나아가 이들 신흥정치세력의 제도정치 진입은 한국 정치궤도를 개혁 차원에서 어느정도는 뒤바뀌게될 가능성이 높고, 가능성이 깊어질수록 사회 각 방면의 발전의 속도는 한층 더 가속화 될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수대연합 판도의 92'대선 시기에 활동하였던 국민회의를 비롯한 전국연합등의 진보



정치세력이 정치적 의미로서의 패배의 침체속에 새로 등장한 스스로를 '이념없는 신사회운동'이라 공인하는 시민운동단체(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정사협 등)들의 약진세를 꼽을수 있겠다.

내년의 지자제선거에 대비한 진행중인 시, 군통합작업이 한참 진행중이다. 예정된 지방자치선거의 대비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시기에 신사회운동세력과 신흥정치(진보정치)세력의 지방조직화 방안이 모색될 것이다. (시민주의의 본고장인 독일과 같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곳에서는 시민사회에서 발생하는 지역문제에 의해 사회운동과 정치세력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향후 10년 이내 지방자치제도의 완전정착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때 현재 중앙조직중심으로 운영하는 이들 세력의 지방조직강화가 필연성이 증대 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진보정치 세력과 노동운동의 정치세력, 그리고 신사회운동 세력이 노선의 차이는 있겠지만 연대전략 모색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같은 모색 노력은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주요한 사회운동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서구의 경험에서 보듯 이들 세력들의 연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의 정치적인 행보 움직임은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을 종합해 볼때 한국사회에도 새로운 정치이념 수준의 제도개혁이 준비 단계에 와 있다고 나름대로 분석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정세분석은 또 다른 정계 개편을 예고와 우리 운동의 진보적 선구자격이라고 할 있는 진보장애인운동계의 정치적, 사회적 전략의 새로운 수정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 > 문민정권의 개혁이 반쪽개혁이나 영항의 파급효과가 적지 않았다.
- > 정치관계법 개정 따른 95년, 96년 양대 선거의 대비한 재야, 신흥정치세력들 움직임 부산
- > 신흥정치세력들의 부산함은 나아가 대 보수대연합의 맞서는 진보대연합의 연합 전선구축의 정계개편이 예고
- > 이에따른 진보장애인운동의 정치적 사회적 전략 수정이 불가피

### 3. 진보장애인운동 연합체 건설의 따른 조직화와 정치세력화 확보.

#### 3.1 왜! 진보장애인운동 연합체 건설인가?

앞(1.1, 1.2)에서도 언급했듯이 과거의 장애인운동의 총체적 의미의 한계가 표면화 된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심신장애자복지법의 개정 및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 등을 견인해 왔던 장애인 임의 단체들의 와해와 통폐합 경향은 장애인운동과 전체 사회복지운동의 정치적 역동성과 정통성의 준거 자체를 흐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어떠한 운동이든 이전의 역사적운동 경험과 축적을 전수하고 그 토대위에서 활용하지 않은 한 생명력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마련이다. 진보장애인운동과 사회복지운동에 있어서도 역사적 변증법칙이 존재하기때문에 최상운동주기와 최하운동주기로의 생명력의 명맥을 볼때 과도기적 주기로 봐야 한다.

현시점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은 앞으로 닥쳐올 정치적 상황이 적지 않은 우리 사회의 이목으로 시민사회에 신흥정치집단의 급부상은 다방면에 걸쳐 변화를 예측 하게하고, 이러한

정치, 경제적 발전측면에서 시대적 필수가결인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상황욕구의 따른 대응론은 다원주의(좌, 우파정당 참여를 전제로 한) 정치제도적 환경과 미약하게나마 서구 사회민주주의의 사회보장제도를 모방한 종합적 국가복지제도의 채택이 필연요건화가 한국자본주의 사회의 중장기적 발전 모델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패턴과 시대적 요청의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장협'의 대외 정책분석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 하며 또한 '전장협' 세력을 주축으로 한사회복지운동 세력과의 효율적인 대응 전략 방안이필요하며 중장기적 사업방향에서는 진보장애인운동과 동일 노선의 기타 관련 온건성향

의 사회복지운동단체를 포함한 진보적 성향의 사회복지연구소와 재야 정치권 세력과의 연대 사업등을 동시에 집행해 나가야 한다. 장애대중의 생활상의 욕구 충족의 정책대안을 마련하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할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며 역량의 중심체를 이룰수 있는 장애대중의 각계층에 참여를 망라한 진보장애인운동연합체'를 건설하는 임무가 가장 시급한 시대적 시점에 와 있는 동시 과제로 남는다.

- > 새로운 정치적 상황의 맞는 정책전략 수정이 불가피
- > 장애대중 참여를 통한 시민운동성격의 '진보장애인운동 연합체' 건설 시급

#### 3.2 '전장협'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 \* 조직 대중사업

지난해 '장한협'과 '장청련'의 통합으로 조직골간의 육성이 부재하고 전반적인 조직체계의 정비조치 어려움속에 통합이 이루어 졌다. 이로 인한 집행부 지도력의 공백과 이탈은 실무 집행력의 저하로 이어져 한동안 침체 국면을 면치 못했다.

운동조직의 양적 극대화와 질적 발전을 이루고 정체를 벗고 조직의 도약을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첫째, 회원, 국원 확보의 확실성이 극복되어야 한다. 장애영역, 등급, 교육, 계층을 불문하고 본인의 자발적 의사결정의 따른 회원, 국원의 확보 방안이 연구, 병행 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조직구성원들의 이탈 예방과 활동강화 요청된다. 이런 모순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신입회원들의 적절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상근자 확보방안이 필수적이다.

셋째, 장차 지방화 시대의 대비한 중앙과 지부, 지회의 관계증진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현단계에서는 지부회원의 모집방안이 가장 급선무이다.

넷째, 조직의 대극화와 정치세력화를 위한 타 단체(재야운동권단체, 신흥정치집단, 사북, 관련 단체, 대학교(원), 연구소 등)와 연대활동 강화필요성과 지도자 개인의 의식개혁을 통한 자질 강화.

다섯째, 기존의 소모임 활성화를 적극 육성한다.

##### \* 교육사업,

특히 운동의 핵심사업이다. 모든 정책사업의 반영되어야 하며 장애정도, 계급별로 다양화



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

1. 사회복지 개념과 사회과학 개념을 통합시킨 기초하에 참다운 복지이념을 연구, 정립해 나간다.
2. 다양한 욕구의 충족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전장협아카데미) 교육내용의 수준을 세분화 한다.
3. 회원골간화를 위한 간부교육을 실시한다.
4. 사회복지 개혁과 정세, 정술의 공유를 위하여 정기적인 토론회를 개최 한다.

\* 정책대안 연구사업

운동조직의 있어서 정책부분은 그 조직의 골간을 이룬다 할 것이다. 수시로 화하는 상황속에서 정확하고 올바른 정세분석과 잘못된 국가복지정책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그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직을 올바르게 이끌고 나갈수 있을 것이다.

1. 광범위한 자료수집을 통한 연구(사회복지 관련법, 장애인고용법 등) 대상범위를 확대 한다.
2. 정기적인 정책 분석 학술토론회를 갖는다.
3. 각부서의 전문인력의 역량을 위한 교육일정 마련 한다.

외부 장애인인사 영입 작업의 총력을 기우일 필요성이 절실하다. 살펴 보면 재야운동권이 나, 시민운동, 제도정치권 내부에는 많은 장애인 인사들이 역사발전의 기여하고 있다. 이런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사업이 바로 조직의 장기적 발전전략 수립의 적지 않은 노하우를 가져다 주고, 전장협의 대내외적 정치적 역량이 증대될것이기 때문이다.

- > 조직의 극대화, 세분화, 전문화.
- > 외부인사영입

3.3 장애민중의 정치 세력화의 대하여!!

한국의 사회복지운동에 있어서 국가의 기능은 취약하기 짝이 없으며 사회운동 또는 시민 계몽운동을 통한 국민적 참여구조 또한 모색의 단계에 불과한 실정인 것이다.

한국자본주의는 지배계급의 이익의 도구로서 억압적인 기능만 강조하지 않고강제력과 헤게 모니 행사를 동시에 행사하는 복합적인 국가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특히 국가복지영역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한국사회 지배집단은자신들의 위치를 유지확대발전하는 일정한 방향 한도내에서, 즉 실질적, 적극적 차원의 복지정책을 모색하고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 시혜적 차원의 미온적인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지배집단의 지배이데올로기의 확산으로 기여해 온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장애인 운동의 적극적 활동범위는 국가권력의 대한 기동전으로 자본주의 외피만을 감싸주기 때문에 일시적인 불충분성으로 표상하고 있다. 때문에한국 사회복지운동에 총체적 인식과 일련의 정치적, 제도적 문제들의 활로점 '단기적인 문제 사활'을 해결하려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나가야 한다.

복지운동의 적대세력을 부단히 포위하고 복지운동 세력을 확보해 모든 모순에 기초한 현대 자본주의에서 기동전에 대한 혁명전략의 불가능성보다는 한국의 정치관계법 개정따른 개편

일정의 사회적, 정치적 변화 조짐을 관망하는 자세와 전체 사회복지 운동의 전략 모색이 요구된다 하겠다.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상황은 나아지겠지만 중요한것은 장애인중의 개인들이 사회복지 개혁의 주체인으로서 의식 성장이 확산되어야 하며, 전장협과 같은 진보적 사회복지 운동단체에서는 장애인중의 시대적,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거국적인 '시민운동 형태'의 운동연합체를 건설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